

진보대통합 합의 이후
진보진영의 진정한
단결에 복무해야

▶ 3면

스페인
청년 반란이
전국을 뒤흔들다

▶ 8-9, 16 면

노동자 투쟁
주간연속 2교대와 투쟁
의 과제

▶ 4면

인민전선의 역사적 교훈 ④
해방정국의 조선과
좌우합작

▶ 12면

반자본주의 연재 ④
기후 변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 11면

발행인_ 김민식 편집인_ 김재현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2)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777-021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71

Left21.com

제58호 | 2011년 6월 4일 ~ 6월 17일 | 값 1,800원

레프트21

갈 길을 보여 준 이들을 지지하고 연대하자

“밤에는 자고 싶다”는 유성기업 노동자들

조명지

이명박 정부는 순식간에 솟구쳐 올라 강력한 힘을 과시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에 놀라 신속하게 경찰력을 투입해 5백6명을 연행하고 두 명을 구속했다.

그리고 이명박은 라디오 연설에서 “파업하고 기업 문 닫고 최악의 사태를 겪은 다음에야 협력과 상생의 중요성을 깨닫는 일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열다섯 명이 연쇄 자살·사망한 쌍용차를 “노사관계가 안정”된 사례로 들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런 강경 대응은 노동자 투쟁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두려움에서 비롯한 것이다. 지난해 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5일 동안 공장 점거파업을 벌여 지배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홍익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청소 노동자들과 전복 버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이 중 대하 청소 노동자들과 전주 버스 노동자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불만 속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노동조건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6.2퍼센트의 성장을 이루고 GDP 2만 불을 회복했다지만, 실질 소득·임금은 줄어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누적돼 왔다.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이 심화되고 분열이 심각해지면서 노동자들의 투지도 살아나고 있다.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이 노동자들의 자신감 회복을 일정하게 자극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광범하게 노동자 투쟁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몇몇 작업장의 투쟁이 참여해지거나 순식간에 전국적인 초점을 형성하곤 한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이 바로 그런 경우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완성차에 대한 독점적 제품 공급과 숙련 노동에 기반해 작지만 탄탄한 노조를 구축해 왔다. 엄격한 유성기업지회 부지회장은 “IMF 경제 위기 때도 18일에 걸친 전면 파업으로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물리쳤고,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어 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노조는 이런 투쟁들 속에서 2009년에 ‘2011년 1월부터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 4면으로 이어짐



정선영



정선영

점거 파업을 한 유성기업 노동자들(위), 점거 농성중인 서울대 학생들(아래)

서울대 학생들의 법인화 반대 점거 투쟁

정선영

서울대 학생들이 법인화에 반대해 본관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5월 29일 학생총회에는 정종수가 훌쩍 넘는 2천 3백여 명이 참가했다. 95퍼센트가 서울대 법인설립준비위원회(설준위) 해체 요구를 지지했고, 84퍼센트가 본부 점거를 지지했다.

“본부 업무를 마비시키자. 그래야 본부가 협상에 나올 수 있다”(인문대 학생회장)는 발언이 큰 지지를 받았다.

지금 서울대 본관은 학생들의 해방구가 됐다. 국기 게양대엔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들의 깃발이 나부긴다. 1백 명이 넘는 학생들이 본관 1층부터 4층까지 건물을 점거하고 있고, 본부 업무는 대부분 마비됐다. 본관 안팎엔 학생들이 쓴 대자보와 만화와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다.

본관 1층엔 빵, 우유, 음료수 등 이름 모를 시민과 학생들이 보낸 지지 음식이 계속 배달되고 있다.

서울대민주화교수협의회와 서울대 공무원노조,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도 기자회견을 했다.

“학생들이 자랑스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입니다.”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

정말이지, 서울대 총학생회와 학생들의 용기있고 단호한 투쟁은 우리 모두를 고무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학생들이 “폭력까지 동원하는 반지성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한다. 총장은 점거가 “불법”이라며 점거를 풀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영찬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비상학생총회는 내가 끝까지 지켜봤는데 어떠한 폭력이나 기물 파손이 없었어요. 굉장히 민주적으로 진행됐어요”라고 말했다.

오히려 대학 구성원들의 삶과 교육의 미래가 걸린 서울대 법인화를 단 1분만에 날치기 처리한 국회와, 강압적으로 추진해 온 서울대 당국이야말로 “반지성”적이고 “비민주적”이다.

지난 6개월간 학생, 교수, 직원이 법인화를 반대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서명을 받았지만 학교는 이를 완전히 묵살해 왔다. 심지어 얼마 전 교수 1백45명이 면담을 요청했지만 총장은 “바쁘다”며 거절했다.

» 5면으로 이어짐

누구의말알아요?

“아마도 외계인이 그 연설을 들었다면, 오바마가 중동의 혁명을 적극적으로 도운 줄 알 것이다. 사실 그는 독재자가 살아남기를 바랐는데”

오바마의 새 중동정책을 비웃는 진보 언론인 로버트 피스크

“쌍용차에서 ... 예전에 차 한 대 만들던 시간에 이제는 세 대를 만들고 있다니 놀라운 일”

노동자를 이토록 쥐어짤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한 이명박

“고ру한 이념의 낡은 진보와의 갈등도 두려워해선 안 된다.”

손학규, 벌써 진보 타령이 싫증났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짝퉁은 오리지널에 밀릴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에 냉소하는 (조선일보)

“등록금 다 공짜로 하면 나라 문 닫는 수가 있다.”

김문수의 어설픈 협박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수의 이미지는 몹시 부정적입니다. 기득권, 특혜, 무능, 부패, 권위주의, 독재, 위선, 탐욕, 이기주의, 의무불이행 등”

정두언

“미친 X, 아가리 닥쳐라, 못 생겼으면 함부로 씨부렁 거리지 마라.”

김여진 씨에게 한나라당 자문위원 박용모가, 수준 드러났다.

“지금 밖에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노동자 서민들이 공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레프트21〉 판매자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그만하라는 판사의 명분

“한나라당 의원들 먼저 국정 평가를 해서 B학점 이상에게만 월급 주자.”

한나라당의 B학점 이상 반값 등록금에 대한 반응

저축은행 게이트, 고엽제 파문, BBK 의혹..

수렁으로 빠져드는 이명박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을 들고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고 또 사기치는구나.’ 실제로 ‘반값등록금’은 2007년에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내세웠던 공약이다. 정두언의 말처럼 “한나라당에 대해 20대는 ‘재수 없다’, 30대는 ‘죽이고 싶다’, 40대는 ‘관심도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무상의료’의 어설픈 짝퉁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사기극은 며칠도 안 돼 실체가 드러났다. ‘B학점 이상, 부실대학 제외’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무엇보다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무더기 폭력 연행하면서 ‘부실 B급 우파’로서 한나라당의 본색만 드러났다.

지금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를 뒤흔들고 있는 것은 부산저축은행 게이트다. 어떻게 이런 부실투성이 은행이 정부와 감독기관들의 비호를 받을 수 있었고, 포스코와 삼성에게 투자 자금 수백억



진보이 기자

5월 29일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폭력 연행한 경찰 ‘부실’ 정부가 벌인 사기극의 진실

원을 받을 수 있었고, 영업정지 때는 VIP들만 돈을 빼돌릴 수 있었는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주요 MB맨들이 부산저축은행의 사외이사였고, 로비자성이 은행이 정부와 감독기관들의 비호를 받을 수 있었고, 포스코와 삼성에게 투자 자금 수백억

라”고 할 만 했다.

그 ‘오만 군데’가 어디인지도 뻔하다. 로비스트가 대통령인수위 출신이거나 소망교회 장로 출신이니 말이다. 특히 소망교회 장로는 이상득과 친하고 이명박과 소모임을 같이 했다고 한다. 그래서 물방울 다이아를 받은 MB맨은 진수에 이어서 청와대 수석들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다.

이 자들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박성자 할머니처럼 “30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소처럼 일하며 파출부, 세차장, 폐지수집 안 해 본 일이 없”는 분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나라”를 만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6차 재판

“탄압은 부메랑이 돼 이명박의 심장으로 향할 것”

5월 19일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에 관한 6차 재판은 한 편의 통쾌하고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레프트21〉 판매자 6인은 지난해 5월 거리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다가 폭력 연행된 후, 1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 왔다. 그동안 〈레프트21〉 신문 판매 행위를 “미신고 집회”라고 우긴 검찰 측은 이날 완전히 체면을 구겼다. 심지어 검사가 내세운 증인도 검찰의 편이 아니었다.

당일 인민에서 꽃을 팔고 있었던 증인은 피고인들이 불법 집회를 하는 것을 봤다는 그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다. 환자복을 입은 채 목발을 잡고 법원에 출석한 증인은 검찰과 법원 측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나는 영문도 모르고

소환됐다. 소환 통지서에 적힌 글귀가 무서워서 왔다.”(법원은 그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검사는 “구호를 제창하고 신문 형식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일련의 행위는 집회”라고 우겼다. 그리고 김지태·김형환·신명희·조익진 등 네 명에게 벌금 1백 만 원을, 김득영·김문주 등 두 명에게 벌금 2백 만 원을 구형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이런 검사의 주장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레프트21〉 판매자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신문 판매 행위를 옥의 집회로 보고 형사 처벌한 사건입니다. 집시법상의 ‘집회’를

이렇게 무한정 넓히면, 모든 상품 판촉 활동과 오늘 출석한 증인의 꽃 판매 행위도 집회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진보적인 소규모 신문사들이 거리에서 직접 독자들을 만나 판촉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많은 국내의 언론이 이번 재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곧바로 이어진 피고 6인의 최후진술은 이번 재판의 백미였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인 김지태는 “검찰과 경찰의 진정된 속내는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이 꼴 보기 싫었던 것”이라고 정곡을 찔렀다.

그는 “정부가 〈레프트21〉과 같은 비판적 언론을 증오하는 것은 〈레프트21〉이 정부가 숨기려 하는 진실을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공격은 언젠가 부메랑이 돼 정확히 자신의 정치적 심장으로 향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수 갈채

“검찰은 우리가 처벌로 위축되길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축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 거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잘못된 이 체제와 지배자들을 향한 비판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다섯 명도 속 시원하게 이명박 정부와 이윤 체제의 위선을

레이뮬 속에서 온갖 의혹들이 ‘독이 무너지듯’ 쏟아질 기세다. 그 중에서 특히 에리카 김이 다녀간 후 다스가 김경준에게 받은 1백40억 원을 포기하면서 불거진 BBK 의혹은 심상찮다. 도곡동 땅 – 다스 – BBK로 이어진 이명박 시한폭탄의 뇌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여기에다 얹힌 데 덮친 격으로 이명박과 우파의 기동서방 같은 미국이 사고를 쳤다. 고엽제 매물이 들끓던 것이다. 지금 우파들은 이 사건이 2002년 미군 탱크의 여중생 압사 사건과 같이 발전해서 친미우파들을 무덤으로 파묻을까 봐 등에서 식은 땀을 흘리고 있다.

결국 이명박은 갈수록 사면초가로 몰리며 수렁에 빠지고 있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돈봉투까지 주면서 ‘제발 정상회담 한번 하자’고 구걸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겠나. 이런 기회를 투쟁 건설에 이용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아까운 일도 없을 것이다.

전지윤

폭로하며 “〈레프트21〉과 함께 투쟁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정이 찌렁찌렁하게 울릴 정도로 열변을 토하며 당당하게 정당성을 주장해 방청석을 메운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았다(이들의 최후진술문 전문은 〈레프트21〉 웹사이트를 보시오).

재판을 방청한 한 청년은 “법정이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곳인데도 기죽지 않고 최후진술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밀려왔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7월 28일 오후 2시다. 많은 이들이 함께해 당당하게 언론 자유와 투쟁의 대의를 주장하는 여섯 명에게 연대의 힘을 보태자.

박설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ABC뉴욕제과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종각역 4번 출구 피아노거리 입구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대문 롯데백화점 앞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세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 앞), 이음책방(대 학교),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한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 공장 앞)

〈레프트21〉 온라인

〈레프트21〉 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베트남 이주노동자 재판

짐승 취급에 맞선 파업은 무죄다

인전 신항 컨테이너 하부 축조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2백여 명은 지난해 7월과 올 1월 두 차례 파업을 벌였다. 그리고 이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열 명이 ‘업무 방해’와 ‘공동 폭행, 집단·흉기 등 상해’ 같은 무시무시한 혐의로 구속돼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은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범죄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결과이고, 추가로 베트남 이주노동자 열일곱 명이 수사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노동자들이 당한 짐승같은 대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형편없는 식사를 하고, 12시간씩 주

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도 고작 최저임금을 받고, 심지어 매일 한 시간 분 임금을 갈취당했다.

최근 검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불법 파업과 파업 비참가자에 대한 폭력 행사”라며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실형 1~3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이들이 파업의 주동자이며, 나머지 노동자들에게 협박과 무력을 사용해 파업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실은 열악한 조건과 부당한 처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두 차례나 파업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1차 파업은 정해진 시간보다 10분 일찍 식사를 했다고 노동자들을 공격한 회사 측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시작됐다. 2차 파업도 마찬가지로였다. 사측은 임금 삭

감 통보에 분노해 업무를 거부한 노동자들에게 “노동부에 신고해 모두 추방해 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이것을 지켜보면 다른 노동자들이 격분해 투쟁에 동참했다.

검찰이 문제 삼는 집단 폭력 부분도 지극히 과장됐다. 장서연 변호사는 “자세히 들여보면 극히 경미한 사건”이라며 “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때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계속 말해왔다”고 했다. 이른바 ‘폭력 집단’으로 몰아가려고 사후적으로 배치된 것이다.

파업을 벌인 베트남 노동자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데 이주노동자를 이용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바로 이것이 경찰과 검찰이 그토록 가혹하게 이들을 탄압하는 진정한 이유다.

따라서 우리는 베트남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옹호하며 석방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고무적이게도 지금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뿐 아니라 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등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연대를 추구해 온 건설노조 활동가들도 방어운동에 뛰어들었다. 인권 변호사도 적극 나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변론을 펼 수 있게 됐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활동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이 운동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이정원



6월 4일(토) 오후 3시
유성기업 경찰 탄압 규탄 집회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6월 11일(토) 오후 3시
이명박 정권 심판 6월 총결기 투쟁 결의대회(전국 동시 다발)
서울시청광장

6월 29일(수) 오후 3시
이명박 정권 심판 범국민대회(서울 집중)
서울시청광장

진보대통합 합의 이후

이제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에 복무해야

6월 1일 새벽,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서 주요 참가 단체들이 최종 합의문에 적극 합의했다.

많은 노동자와 학생 등이 진보의 단결을 염원해 왔고, 반면 우파들은 '진보는 분열로 망하기'를 바라 온 만큼 이 합의를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것이다. 사실 그동안 진보정당의 분열과 서로에 대한 분파적 태도 때문에 노동자·민중의 단결과 투쟁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정의현 수석부위원장의 말처럼 "민주노총 조합원 90퍼센트가 통합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문 자체에도 진보의 가치라는 기준에서 볼 때 의미있는 내용들이 적잖게 포함돼 있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세계 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자본주의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며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 존중·노동 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노동자·민중이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치권력을 수립하기 위한 진보적 대중정당"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부속합의문으로 채택한 '20대 주요 정책과제'도 진보세력 공동의 투쟁 요구로서 큰 손색이 없다. 비정규직 해소, 무상의료, 무상교육, 투기자본 규제, 핵발전 폐기, 국가보안법 철폐, 해외 파병 반대, FTA 반대 등이 그것이다.

물론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먼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완주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가치 중심의 정책연대와 호혜 존중을 기준으로 선거연대를 추진할 수 있다"며 민주당과 계급연합(민주대연합)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둔 것은 우려스럽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강령에도 있고, 원래 연석회의의 합의문 초안에도 있었던 "자본주의 극복"이 "자본주의의 폐해와 한계 극복"으로 조정된 것도 다소 아쉽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나 아랍



손에 손 잡고 이것을 민주대연합으로 끌고 가려 해서는 안 된다.

혁명 등으로 반자본주의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도 말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연결돼 있었다. 민주대연합을 다음 단계로 전제하고 진보대통합을 추진하다보니 계급적 내용을 툰다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향에 반대할 것이 분명한 계급좌파들은 이 과정에서 배제됐다. 예컨대 진보대통합을 지지하는 다함께는 연석회의 참가 신청을 거부당했는데, 그 진정한 이유는 연석회의의 주도자들의 '반자본주의' 단체는 안 된다'는 기준 때문이었다.

계급좌파를 배제한 협상은 불신을 더 증폭시켰고, 폭넓은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임성규 전 위원장도 "이탈자를 가속화하는 과정이 되고 있어 매우 불쾌하다"고 했다.

이처럼 연석회의의 주도자들이 진보대통합을 민주대연합의 부속물로 삼으며 패권적으로 우경화된 진보대통합을 추구하거나 진보신당 독자파나 사회당 등이 그것을 명분으로 진보대통합 자체를 사실상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기가 더 쉬웠던 것이다.

물론 '연립정부는 안 된다'는 등의 진보신당 독자파와 사회당의 주장은 일부 타

당성이 있었다. 계급좌파의 참여가 봉쇄된 상황에서 진보신당 독자파와 사회당이 좌파를 대변하는 듯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진보신당 독자파와 사회당은 최근 선거 때마다 추진된 야권연대를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았다. 진보신당 독자파의 일부는 '연립정부도 우리가 힘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진보신당 독자파와 사회당의 민주대연합 반대 주장은 계급연합에 대한 원칙있는 반대라기보다는 자주파에 대한 종파적 반대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원칙있는

연석회의 합의 이후에 진보신당 독자파가 취하는 태도도 무원칙하다. 박용진, 최병천처럼 민주당과 아예 당을 합치자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한목소리로 진보대통합 합의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원칙있는 좌파의 태도라고 볼 수가 없다.

원칙있는 좌파라면 민주대연합에 분명히 반대하면서 진보진영의 단결을 지지해야 옳다. 그리고 이처럼 진보대통합을 지지하면서도 그것이 우경적 방향으로 흐르

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최종 합의문이 연석회의의 주도 세력 입맛대로만 되지 않을 수 있었다. "자본주의 극복" 문구가 4차 대표자회의에서 빠졌다가 최종합의문에서 "자본주의 한계와 폐해 극복"으로 다소 완화되게 살아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물론 최종합의문은 핵심 쟁점에서 절충이 되면서 민주노동당 주류와 진보신당 독자파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에서 큰 반발은 없었지만, 진보신당은 벌써 내분과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 다함께와 <레프트21>은 각 단체의 정치적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합의가능한 행동강령 중심으로 개방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전선 형태가 단결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사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미 최종 합의가 된 상태에서 계급좌파는 합의 자체를 인정하면서, 새롭게 추진될 진보대통합 기구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성공회대 서영표 교수의 지적처럼 "진보대통합이 정치적 과정이라면 이미 결

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과정에 개입하는 정치적 주체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성격과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석회의도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문호를 개방하기로 결정한 만큼, 그동안 배제된 계급좌파와 이번 합의에 불참한 사회당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마땅하다.

연석회의의 주도 세력도 일반적으로 이번 합의를 민주대연합 추진의 디딤돌로 삼으려 하면서, 추진위원회 개방을 국민 참여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통로로 만들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시도는 또다시 분란을 자초하고 진보대통합에 난관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반MB 야권연대 하자면서 한EU FTA 통과를 묵인하는 이중성을 보여 온 민주당과 연합하기 위해 진보대통합을 이용하려 한다면 명분도 신뢰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진보대통합 정당의 과제는 노동자·민중의 단결과 투쟁을 건설하는 것에 분명히 뒀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사회 변화에 기여하며 진보정치의 독자성과 대중성을 함께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중복주의’와 ‘반복주의’의 대립?

이번에 가장 뜨거운 대립 지점이었던 북한 문제에서 최종 합의문은 이렇게 절충됐다.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남과 북 어느 정부의 정책이든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정책 및 민주주의와 인권, 생태 등 각 분야의 진보적 가치를 신장시키는 정책은 지지 지원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에 반하는 정책은 비판하는 정당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6·15 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

현재 이 합의문에 대한 진보신당 독자파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반발 중에 일부 내용은 우파적 동기에서 비롯한 듯해서 우려스럽다.

예컨대 진보신당 내에서 가장 우파적 입장에 있고 공공연하게 민주당까지 포함한 단일정당 건설을 주장하는 최병천은 합의문이 “친북 편향 정당”을 반복하

지 않겠다는 조직적인 성찰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한다. 최병천 등은 민주노동당 분당 때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던 당원을 제명해서 중복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자'는 반동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중복주의'는 명백히 마녀사냥 냄새가 나는 고약한 용어였고, 북한 지배자와 남한 민중 운동의 일부인 자주파를 구분하지 않는 태도는 큰 잘못이었다.

반면, 민주노동당 자주파처럼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억압, 3대 세습을 비판하는 견해를 무조건 '반복주의'라고 매도하는 것도 잘못됐다. 더구나 지금 상황은 새 진보정당의 지향을 다루는 것이므로 2008년 '중복 소동'과는 상황이 다르다.

우리가 남한 사회에서 끊임없이 던져야 할 질문이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그리고 남한 사회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답변이 북한에도 적용돼야 한다.

그래서 다함께와 <레프트21>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을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

인 사회라고 보며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와 군사적 위협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이런 태도를 취해야 우파가 사회주의를 소름끼치는 독재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지배계급은 이런 종류의 북한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런 입장이었던 국제사회주의자들(IS) 그룹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2백 명이 넘는 회원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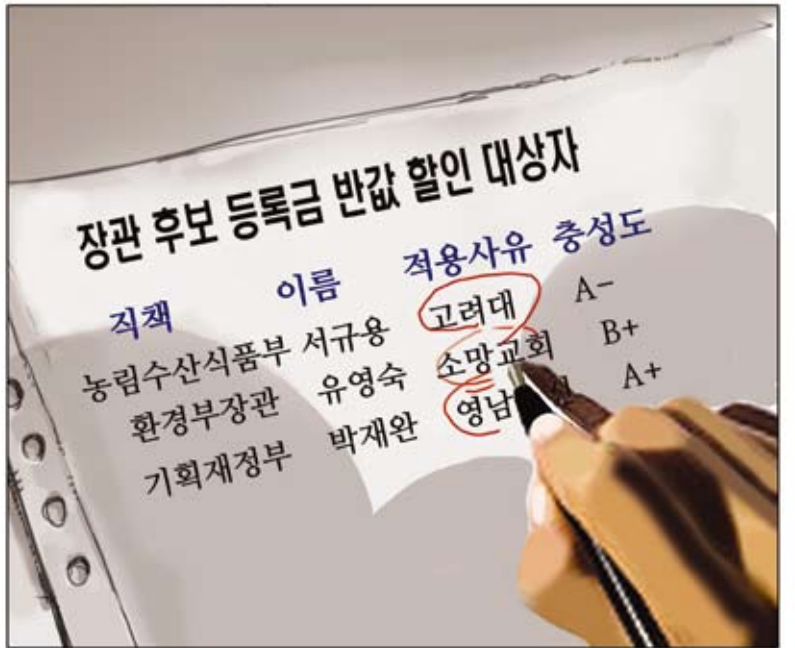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북한 비판은 지배계급에게 '합리적 진보'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 변혁 대안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권력을 세습하는 북한이 사회주의라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본주의에 반감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에 환멸감을 느낄 것이다. 진보진영은 북한이 사회주의와는 아무 관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진정한 사회 변혁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김문성·전지윤

콜라주 ⑤2

콜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그들의 반값 등록금



일루전

주간연속2교대제

‘잠 좀 자자’는 절박한 요구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사상 최초로 심야노동에 따른 수면·각성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장호철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선전실장**이 주간연속2교대제의 필요성을 말한다.

현대·기아차 사측은 2005년에 노조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2009년 1월 시행)을 합의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부품사의 부실이 커진다’며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약속이행을 미뤄 왔다.

그러나 부품사의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막아 온 게 바로 현대·기아차 사측이란 것이 밝혀지면서 이들의 변명은 군색해졌다.

유성기업 파업은 그동안 금속노조 내에서만 논의돼 온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크게 높였다. ‘잠 좀 자자’는 절박한 요구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것은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기업의 44퍼센트가 심야노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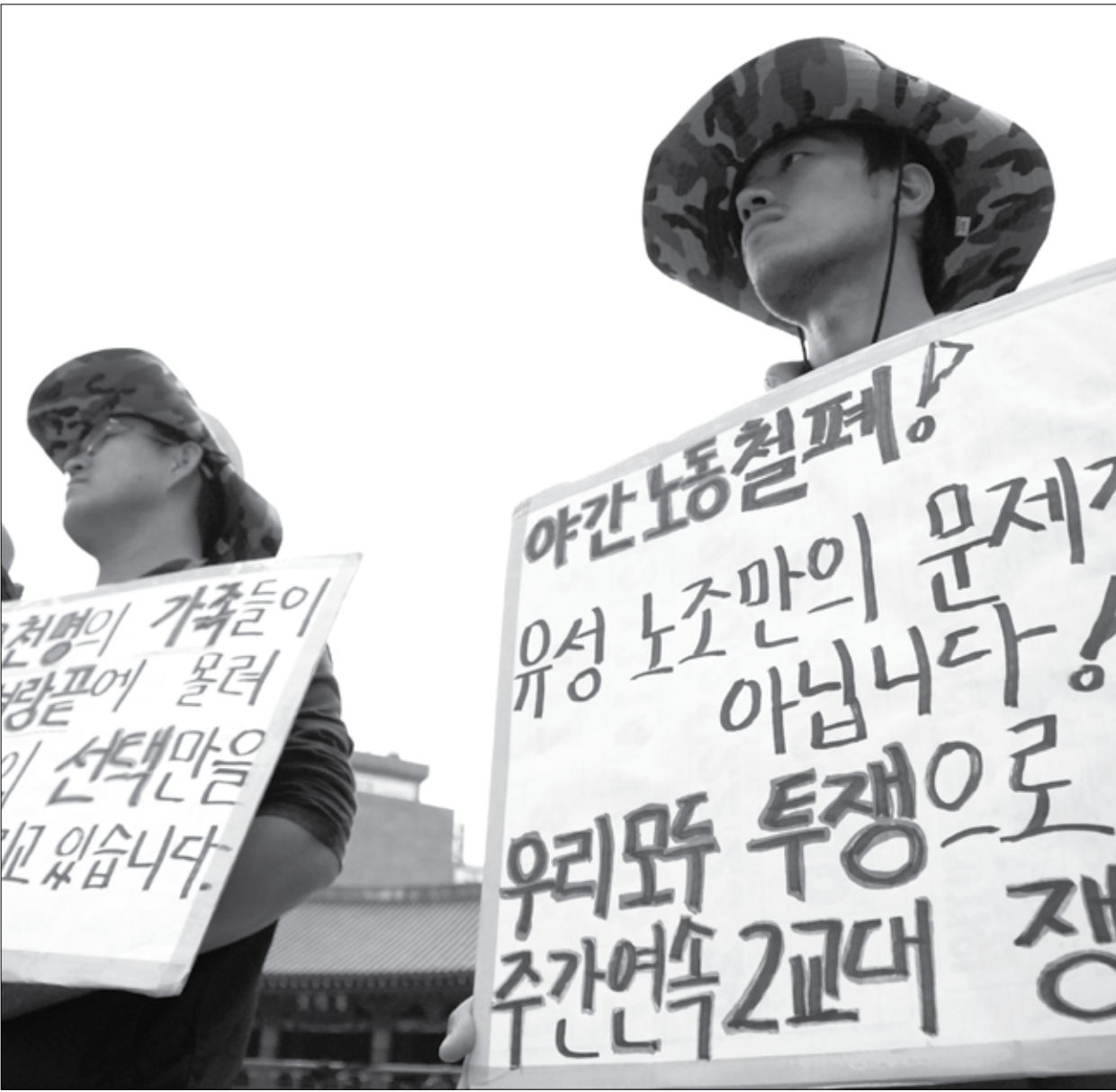
주·야간 교대근무는 수명 단축은 물론이고,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심혈관 질환·암·수면장애에 따른 정신질환은 노동자들을 쪼먹고 있다. 자동차 공장에서만이 아니라, 야간노동에 시달리는 철도 노동자들도 정년 퇴직 후 중풍·협심증·뇌출혈·심근경색·암 등 각종 질환을 앓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사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선 야간 근무자에게 이틀간 휴식 시간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선 ‘잠 좀 자자’는 요구에 경찰의 군복 세례가 쏟아지기 일쑤다.

‘주간연속2교대제가 시행되면 생산성 감소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재계와 보수 언론의 주장도 엄살이다. 현대·기아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6천6백74억 원이면 연간 30만 대를 생산하는 공장 하나쯤은 거뜰히 짓고도 남는다. 그러면 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일자리도 크게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이 돈이면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월급제와 임금 보전 요구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유성기업 파업이 낳은 기회를 살려 투쟁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동법을 개정해 병원 같은 곳을 뺀 나머지 작업장에선 심야노동을 원천 금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잠 좀 자자”는 게 ‘귀족 노조’의 이기주의라고? 한국 노동자 44퍼센트가 죽음을 부르는 심야노동에 시달린다. 주간연속2교대제는 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절박하고도 정당한 요구다.

“강력한 파업으로 주간연속2교대가 가능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 두원정공은 지난해 9월부터 자동차업계에선 유일하게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두원정공 노조 지회장 출신인 이기만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임금 삭감을 우려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잔업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부족분 월 1백~1백50만 원을 월급제 시행과 주말 특근으로 보

존했다. 그동안 잔업이 없던 라인에선 월급제 도입으로 임금이 훨씬 올라갔다.

“무엇보다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이 나아지고 있다. 가족·친구와 함께할 시간이 늘고 여가 활동도 할 수 있게 돼 만족도가 높다.”

물론, 두원정공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호락호락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기만 지부장은 “2006년에 20여 일 이상

파업해 완성차의 엔진 라인까지 멈추게 할 만큼 강력히 투쟁했기에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이 가능했다”고 했다.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하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한 것은 바로 파업이라는 노동자들의 무기였던 것이다. 이런 투쟁을 더 확대·강화해 더 많은 작업장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정취해야 한다.

이영일

》1면에서 이어짐

지난 1년 6개월 동안 노동자 다섯 명이 돌연사나 자살로 사망하는 등 야간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온몸으로 겪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밤에는 자고 싶다”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절박하다. 이런 요구가 ‘지나치다’는 보수 언론·자본가 단체·정부의 주장은 정말 기가 막힐 뿐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주간연속2교대제를 정취할 경우, 임단투를 앞두고 있는 현대차·기아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파업 전부터 현대차 구매담당 총괄이사가 공장에 상주하며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렇게 현대차 자본을 등에 업은 유성기업 사측은 노동자들이 두 시간 시한부 파업을 벌이자 곧바로 불법 직장폐쇄를 감행했고, 용역강제를 고용해 노동자들을 차로 끌아몽개는 등 ‘살인미수’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즉각 공장을 점거했고, 순식간에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드러냈다. 5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한

국 자동차 산업에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다.

공장 점거 이틀 만에 기아차와 현대차의 생산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파업이 더 길어질 경우 GM대우·르노삼성·쌍용차 등에도 엄청난 타격이 예상됐다.

정부와 사장들은 공포에 떨었다. 이들은 발작적 태도를 보이며 “고역 연봉”, “외부세력 개입” 등 온갖 비방을 퍼부었다. “연봉 7천만 원”이라는 거짓말도 등장했다.

그러나 유성기업의 16년차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이마저도 수명을 단축시키는 야간노동과 고된 노동의 대가다.

더욱이 재벌들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 엄청난 재산을 불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데, 주 60시간 이상 빼 빠지게 일해 온 노동자들은 임금을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

유성기업 점거가 자신들에게 끼칠 손해와 노동자들의 투지 상승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정부와 자본가들은 겁에 질렸다. 그래서 이명박은 매우 신속하게 경찰 수천 명과 포크레인·물대포·헬기 등을 동원해 비무장한 노동자들을 짓밟

았다.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치적 초점을 제공하는 공장 점거파업을 중단시키려고 인간힘을 쓴 것이다. 공장 점거가 계속됐다면 그 힘은 정말 엄청났을 것이다.

파급력

지역 노동자 1백여 명이 공장 점거에 동참하고, 같은 부품을 생산하는 대한이연지회가 대체 생산 거부를 선언하는 등 헌신적인 연대가 이어졌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미 전국적 투쟁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힘을 집중해야 했다. 아쉽게도 우리 쪽보다 저들의 응집력과 신속함이 더 우세했고, 점거 노동자들은 공장 밖으로 밀려났다.

그럼에도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연행됐다 풀려나자마자 다시 집결해 공장 앞 비닐하우스에서 노숙하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노동자 4백여 명이 주·야간으로 돌리던 공장을 관리자 1백여 명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숙련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라 0.5센티미터의 작은 차이에도 불량이 나오는

데, 이 상태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투쟁은 끝난 게 아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자신감과 투지를 잃지 않고 거점 투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지와 연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밤에는 잠 좀 자자”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와 이에 대한 지지·연대가 계속된다면 정부와 자본가들도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다. 유성기업 투쟁의 불씨가 살아 있어야 다른 곳으로 번져가기도 쉬울 것이다.

현대차·기아차 노조의 활동가들도 이 소중한 기회를 부여잡아 투쟁과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노조를 탄압하고 불법 대체인력으로 생산하는 유성기업 부품에 대한 전수검사 실시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도 연대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5월 3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유성기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6월 하순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정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연대 투쟁과 시기집중 임단투 건설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

임금·노동강도 후퇴 말아야

최근 현대차 부회장 윤여철은 “주간연속2교대제는 ‘인력’ 문제와 ‘시간당 생산대수’ 협상이 잘 되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노동강도를 늘리고 인건비를 절감해 주간연속2교대제를 누더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그동안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노동강도 강화·고용 불안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요구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주요 노조 지도자들이 지난 수년간 사측과 협상하는 데만 치중하며 애초 원칙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현대차 노조 지도부는 2008년에 ‘기존 생산량을 유지해 임금을 보전한다’는 식으로 생산성과 임금을 연동시키는 방안에 합의했고, 지난해엔 노동강도를 높여 시간당 차량 30대를 더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당연하게 여긴다. 대표적으로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의 이상호 연구위원은 “주간연속2교대제 논의가 임금 유지에 기울어져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정작 이 요구를 관철할 진정한 동력 – 현장조합원들의 투쟁 – 을 끌어내기 어렵게 만든다. 안 그래도 낮은 기본급 때문에 잔업·특근도 마다않고 심지어 서로 일감(물량)을 차지하려고 반목하는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임금 인상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해선 투쟁을 확대·강화하기 어렵다.

더불어, 이 투쟁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일자리 창출 투쟁과도 결합돼야 한다. 그래야 광범한 사회적 지지도 받을 수 있다.

요컨대, 유성기업 투쟁으로 사회적 초점이 된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이 성공하려면 임금 인상, 노동강도 강화 반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방향을 분명히 할 때 단위 작업장을 뛰어넘어 완성차·부품사·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울 수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데, 현대·기아차 노조가 여기에 초를 처선 안 되지 않는가.

박설

이렇게 합시다

-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끈질기게 싸울 수 있도록 투쟁 기금을 보냅니다.
모금 계좌: 농협 352-0283-9372-13 (예금주 조미숙)
- 자신이 속한 노조·단체·학생회·동아리 등에 제안해 파업 지지 성명을 내고, 각종 웹사이트에 게재합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볼 수 있도록 가족대책위 카페(<http://cafe.daum.net/YPRO5>)에도 가입해 올립니다.
- 투쟁 지지 배너·대자보를 제작해 공장 앞 농성장으로 보냅니다.
주소: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룡리 269 조선영농 조합법인 이충범
- 유성기업 사측에 항의전화 합니다.
전화: 041-539-5000
팩스: 041-539-5009
- 6월 4일(토) 오후 3시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개최될 집중 집회에 함께 합니다.
평일엔 매일 열리는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 집회(오후 7시 30분)에도 함께합니다.

지운 서울대 총학생회장 인터뷰

“법인화 추진을 중단할 때까지 점거할 것입니다”



“학생 총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6년 만에 서울대에서도 총회가 성사됐죠. 비상총회에 가장 많이 참석했을 때는 2천3백 명이었어요.

저희는 법인화 설립위원회가 해체될 때까지 점거를 풀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학장단은 학생들이 ‘불법’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학교에서 처음부터 학생들의 총투표 결과를 인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했으면 저희가 점거까지 할 이유는 없었겠죠.

설립준비위원회 중단하고 총투표를 실시하라는 우리의 의견에 대해 학교 측은 설립준비위원회에 ‘관심 가져 줘서 고맙다’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학교의 비민주적인 태도를 보면서 많은 학생들이 분노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압박을 넣으려고 본관 업무를 정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학교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업무정지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매일 촛불집회를 계속하면서 학생들을 모아가려고 하고요. 학생들에게 참여를 호소하는 홍보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점거 프로그램 준비팀도 모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유의미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 저희는 수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다른 학교들에서도 서울대 학생들을 지지하는 지지 성명서, 플래카드를 보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국립대 학생들도 법인화에 맞서서 투쟁을 한다면 전국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 힘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인터뷰·정리 정선영



점거 이틀째인 5월 31일 서울대 본관 앞에서 열린 촛불 문화제

》1면에서 이어짐

법인화의 폐해는 이미 학생과 교직원들의 피부에 와 닿고 있다.

올해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전공도서관을 제외한 신간 도서 매입을 중단했다. 법인 설립 준비 때문에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각 단과대학 예산도 지난해에 견줘 10퍼센트가량 깎였고 연구소, 박물관, 전산원 등도 피해를 봤다.

실제로 법인화가 된다면 학생과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다. 점거를 지지하는 촛불시위에 참가한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종우 씨는 “법인화 과정에서 우리와 같은 해고자들의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인화는 국립대학을 그야말로 기업화하는 것이다. 수익성 논리가 대학을 지배하게 되면 등록금 인상, 기업의 입맛에 맞는 구조조정이 벌어질 것이다.

서울대 법인화는 서울대만이 아니라 전체 교육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서울대를 필두로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학 법인화가 추

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 법인화는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과 구조조정도 부추길 것이다.

연대 건설

따라서 서울대 학생들의 점거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대 당국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끈질기게 조직하고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려면 점거(농성)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는 매우 헌신적으로 점거를 조직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회 단위로 다 포괄되지 않는 동아리, 개인들도 점거에 참가하고 있다. 이들도 포괄하는 기구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점거를 지속해야 한다.

농성을 유지하려면 음식물부터 온갖 물품을 준비하고, 규찰·홍보 등 다양한 활동들을 조직해야 하는데, 점거위원회를 통해 이런 일들을 더 효과적

으로 분담할 수 있다.

점거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면 혹시나 점거가 길어졌을 때 생길지도 모를 후진적인 압력에 대응하기도 유리하다.

점거 농성에 대한 연대도 더 확대되어야 한다. 교수와 교직원들의 실질적인 연대가 늘어나야 한다.

서울대 법인화를 폐기시키려면 학생, 직원, 교수와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대집회도 건설될 필요가 있다.

법인화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립대 총학생회는 서울대 농성장에 방문해 시립대 학생들이 쓴 메시지를 전달해 서울대 학생들을 고무했다.

경북대 학생들도 6월 2일 법인화 반대 총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한대련도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이명박 정부에 맞서 매일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한신대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해 동맹휴업을 하고 상경투쟁할 계획이다.

이런 투쟁들이 연결돼 강력한 연대 행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서울대 노조들은 설준위에 참가하지 말아야

서울대 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 서울대 지부는 옹계도 ‘설준위 해체’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비상총회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조 지도부는 모순되게도 설준위 참여기조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법인화를 폐기하기는 어려울테니 참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법인화는 정확하게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겨냥하고 있다.

설준위에서 학교 측이 노동자들의 처우를 보장하겠다는 입발린 말을 하더라도 법인화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두길보기를 하지 말고 학생들과 함께 투쟁에 분명한 무게를 실어야 한다.

학생들은 노동자들도 줄곧 저지 투쟁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호소에 응답해야 한다. 교직원 비상총회를 하고 점거 투쟁에 함께하기 위한 방안을 결의해야 한다. 학생과 노동자들이 단결해 단호하게 싸운다면 승리할 수 있다.

■ 이렇게 합시다

- 점거 농성장에 지지 방문을 갑시다.
- 점거 농성을 지지하는 대자보와 현수막을 농성장에 부착합시다.
- 서울대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합시다.
- 매일 6시 서울대 본관 앞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참가해 연대합시다.
- 집중 연대 집회가 열리면 적극적으로 참가합시다.
-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서울대 투쟁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합시다.
- 총학생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지지 글을 올립시다.

http://we.snu.ac.kr/pla_free

점거 — 왜 중요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점거 농성은 학생들이 학교 당국의 잘못된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대학 행정 기구 등 학교의 핵심 건물을 점거·통제하면 학교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

점거 농성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참여다. 점거 농성은 학교 안에서 진행되고 모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이 같은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다.

점거 농성하는 동안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기 집회를 꼬박 꼬박 열어야 한다. 이런 집회에서 앞으로 사용할 전술을 논의해야 한다.

이런 집회들은 점거 농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을 조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식당·휴게실·로비 그리고 학생들이

자주 드르는 술집에 리플릿을 돌려야 한다. 점거 농성의 위력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토론과 활동에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농성을 수행하려면 많은 물품을 준비해야 한다. 매일매일 점거 농성 숙보를 발행하고, 규찰을 서고, 홍보를 하고, 강당이나 휴게실을 돌아다니고, 다른 대학들에 대표를 파견하고, 모금을 하고, 연대 단체들이 집회에 와서 연설해 줄 것을 요

청해야 한다. 농성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민주적으로 조직하려면 학생들 가운데서 투쟁 정서를 가장 잘 대표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점거 농성위원회를 선출하는 게 좋다.

점거 농성 위원회는 모든 점거자들에게 농성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점거 농성위원회가 반드시 학생회 간부들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일반 학생들 가

운데서 농성을 창조적으로 잘 이끌어 새로운 지도부가 배출될 수도 있다.

학교 당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역시 선출된 위원회가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점거 농성을 끝낼 시기에 관한 문제나 학교 당국의 양보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집회에서 토론하고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단결해 있고 단호하게 저항한다면,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수 있다.



6월 1일 명동 기습 시위

‘반값 등록금’ 사기극에 맞선 저항

“대학생 73명 연행.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하라.”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시행하라.”

5월 30일부터 학생 2백여 명이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하고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고 있다. 시민들도 행진을 벌이다 경찰에 가로막힌 학생 대열을 방어하는 등 지지를 보내고 있다.

5월 29일 이명박 정부가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던 학생 73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것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정부의 폭

력 만행은 최근 한나라당이 말한 ‘반값 등록금’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보여 줬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꺼낸 “반값 등록금”이 “가짜”라는 사실이 금세 들쭉났다.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소득하위 50퍼센트에게 장학금을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사실 ‘반값’에 턱없이 못 미친다. 등록금 총액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

게다가 장학금 지급 대상을 “B학점 이상”으로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학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카이스트에서도 성적에 따른 등록금 차등 부과는 결국 대학생들의 자괴감을 부르고 자살까지 불렀는데, 학점 제한이라니.”

심지어 한나라당은 이런 “사이비 반값 등록금 정책”을 대학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 ‘부실’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

이다. ‘부실’ 대학이라고 낙인 찍어서 수많은 학생들의 가슴에 찔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

한대련은 6월 국회에서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라고 요구하며 6월 11일까지 매일 저녁 8시, 광화문 KT 앞에서 집회와 행진 시도를 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는 탄압을 중단하고 이 목소리에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정선영

새노추의 ‘불안정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해

사회당과 진보신당 독자파가 주도하는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새노추)가 세를 규합하고 있다.

새노추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촉구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재통합이 “그저 일부 상층에 의한 … 관료적 정치세력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비정규·불안정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자신들의 차별적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민주노총 지도부가 계급연합 전략과 분명히 선을 긋지 않고, 투쟁을 조직하려는 관점이 부족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고 연대하는 투쟁을 잘 조직하지 못했다는 점도 사실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 투쟁이 정규직 노조의 연대 부족으로 안타깝게 끝난 것이나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자녀 우선 채용’을 요구한 것은 이런 문제를 보여 준 최근 사례다.

하지만 진보정당 통합과 단결을 염원하는 정서가 단지 상층 노동조합 간부들만의 것은 아니다. 새노추가 ‘새로운 주체’로 주목하는 불안정 노동자들과 청년들 다수도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맞서길 바라는 심정에서 이런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좌파의 진정한 태도는 이런 단결 촉구 정서에 공감하고 진보통합 과정에 동참하면서 그 방향이 우경화하지 않도록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새노추는 진보신당을 주축으로 삼으려 하는데, 사실 민주노동당을 ‘민주노총당’이라고 비판하며 ‘비정규직 당’을 내세웠던 진보신당의 시도도 실패하지 않았는가. ‘사회현대전략’ 같은 정규직 양보론이나 주장하고, 막상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때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양보 교섭과 점거 종단을 요구했던 게 그 초라한 실체였다.

새노추는 “정규직 노동자 중심인 민주노총의 틀 속에서만 진보정치를 추구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돌봄 노동자



자문 김영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멈춘 공장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은 ‘낡은’ 주체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힘과 가능성을 가진 집단이다. 이들의 구실을 기억하면서 불안정 노동자 조직만을 강조해선 안된다.

를 비롯한 불안정 노동자들” 등 미조직 노동자를 새로운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조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영향력 속에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실과 투쟁의 잠재력을 무시하고, 그 밖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거나 투쟁을 건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민주노총 조직률이 10퍼센트대밖에 안 되지만, 영향력 있는 대기업 작업장에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조직돼 있다. 이들의 힘과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최근 현대차 울산 1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공장 가동률을 절반 밑으로 떨어뜨려 〈월스트리트저널〉조차 “강성노조”에 두려움을 표했다.

〈조선일보〉가 ‘귀족노조’라며 비난한

민주노총 소속 정규직 노조인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추고 점거 농성에 돌입하자 삼시간에 한국의 주요 자동차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자본가들은 사색이 됐다. 우리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에서 정규직 노조의 연대가 뒷받침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

조직 노동자의 힘

이런 힘은 이들이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 점하고 있는 지위 때문에 생긴다. 이들이 투쟁과 파업에 나서면 경제의 주요 부문이 멈추고 그 연쇄효과는 견잡을 수 없이 커진다. 지배자들이 틈만 나면 ‘고임금 정규직’의 투쟁을 비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는 것도 바로 이 힘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 힘을 비정규직의 처지 개선과 다른 사회개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정규직 투쟁과 비정규직·청년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이유가 없다. 좌파는 조직 노동자들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을 비정규직 연대에 사용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새노추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밖에서만 의미 있는 반신자유주의 대안을 건설할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하지만, 오랜 투쟁 속에서 단련된 경험 있는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민주노총과 이 노동자들 중 다수가 여전히 정치세력화의 주요 통로로 여기는 민주노동당(또는 통합 진보정당)을 우회해 강력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건설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새노추가 내세우는 ‘불안정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보정치 혁신,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해서도 진정 필요한 것은 진보대통합과 선 긋기보다는 적극적 개입이다.

최미진



투쟁의 구심 구실을 못하고 있는 ‘민중의 힘’

지난 4월 8일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인 ‘민중의 힘’(준)이 출범했다. ‘민중의 힘’(준)은, 자주계열이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민주대연합(민주당과 계급연합) 노선 탓에 여러 논란은 있었지만 진보진영의 단결과 투쟁이 필요하다는 공감 속에 만들어졌다.

‘민중의 힘’(준) 출범 기자회견 당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투쟁의 구심체”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 ‘민중의 힘’(준)은 투쟁의 구심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민중의 힘’(준)은 우선 6월 투쟁의 포문을 연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실질적인 투쟁의 구심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함께를 비롯한 급진좌파들이 유성기업 투쟁 지원을 위해 제안한 ‘지원대책위원회’조차 일주일이 지나도록 꾸리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이명박 정부는 유성기업 점거파업이 6월 투쟁의 뇌관 구실을 할까 봐 신속하게 경찰력을 투입했다.

‘민중의 힘’(준)은 급진좌파들이 제안한 ‘유성기업 민주노조 파괴 공권력 침탈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제외하곤 지난 두 달 동안 한 일이 없다.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은폐 사건이 터졌음에도 촛불집회조차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한편,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로서 ‘민중의 힘’(준)이 출범했기 때문에 그동안 상설적 연대체를 자임해 온 한국진보연대는 당연히 해소해야 한다. 자주계열이 지난해 ‘한국진보연대 실패와 해소’를 전제로 새로운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한국진보연대와 ‘민중의 힘’이 서로 보완하며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노동과세계〉 5월 4일치)고 말하고 있다. 급진좌파들의 문제제기로 ‘민중의 힘’(준)이 “민주당 및 신자유주의 세력과 연대 연합하지 않는다”고 발목이 잡히자 한국진보연대를 통해 민주대연합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결국 한국진보연대는 상설연대체가 아니라 자주계열의 정치적 결집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꼴이다.

진보진영의 다양한 단체들이 협력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투쟁 건설을 분명한 과제로 삼을 때 ‘민중의 힘’(준)은 투쟁의 구심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영준

‘공동지방정부’ 1년의 경험이 보여 준 쓰디쓴 진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광범위한 선거연합을 통해 많은 당선자를 내는 실리를 얻었다. 이것은 일부 지역에서 ‘공동지방정부’ 구성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인천에선 구청장 두 명이, 경남에선 정부부지사가 공동지방정부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그러나 공동지방정부는 ‘민주당만 생색내게 하는 구실’을 했다. 인천시장 송영길은 굴업도 개발, 송도 갯벌 매립을 중단키로 한 합의를 파기하는 등 합의된 정책 중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공동지방정부는 진보정당의 정체성·독자성·차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주노동당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은 지난해 진보정당 후원 건으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 중징계를 요청했다가 징계 당사자와 진보진영의 비판에 직면해 수위를 낮춰 경징계를 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정부의 징계 지시를 그대로 각 자치구에 시달한, 공동지방정부의 파트너 인천시장 송영길에 타협하려 했던 것이다.

또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출신 강병기 경남 정부부지사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경상남도가 버스요금을 평균 8.4퍼



자문 김영준

민주노동당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은 공동지방정부의 파트너인 민주당에 타협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중징계하려 했다. 이 사례는 민주당과 연립정부 추진이 낱을 미래를 예고한다.

센트 인상했으나 침묵해 버렸다. 공동지방정부의 포로가 돼 버린 것이다.

그러다 보니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공동지방정부가 “자신의 정체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개혁정당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그러나 이런 결과의 원인을 “진보정당의 역량 부족과 제도적 한계”에서만 찾으려 하고 공동지방정부 자체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는 듯하다.

민주노동당 울산시장 김창현 위원장

은 “연립정부든 공동정부든 그 자체가 절대선이요, 혹은 절대악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주체역량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재앙

그러나 역사적으로 프랑스·스페인·칠레 등에서 등장한 인민전선의 연립정부들은 부르주아 정당보다도 사회당과 공산당이 더 강력했지만 마찬가지로

로 재앙으로 끝났다. 공동지방정부의 문제점은 진보정당의 역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계급의 연합을 추구하는 그 성격에서 나온다. 그것은 결국 노동자 진보정당을 마비시키며 부르주아 정당에 종속시켜 버린다.

예컨대, 민주노동당 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은 “구청장의 경우 경영 마인드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남동공단 기업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남동공단 기업주들과 함께 중남미를 돌며 판로 개척에 나서 기업주들에게 “민노당 소속이라 걱정했는데 열심히 일해 고맙다”는 칭찬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공동지방정부의 이런 궤퇴한 결과를 보더라도, 진보진영은 내년 총선·대선에서 연립정부를 추진해선 결코 안 된다.

민주노동당 울산시장 김창현 위원장이 우려한 “진보정당이 개혁진영에게 대중적 지반을 빼앗기고 공중 분해될 위험”을 가져오는 것은 특정한 조건 속의 연립정부가 아니라 연립정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유병규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사건

제국주의의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나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퇴역 미군 병사의 폭로로 주한 미군의 고엽제 매립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경북 왜관의 ‘캠프 캐럴’뿐 아니라 부천 ‘캠프 머서’, 부평 ‘캠프 마켓’, 춘천 ‘캠프 페이지’에도 대량의 화학물질이 매립됐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1970년대에 한국에서 근무한 미군들은 당시 모든 부대에 고엽제를 얹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전까지 미군은 미군 부대 주변 곳곳에 고엽제를 뿌려 왔다. 1960년대에 비무장지대(DMZ)에 고엽제를 살포하는 과정에는 민간인도 동원됐고 “고엽제 살포 작업은 보호 장비 없이 맨손으로 진행됐다.”(녹색연합)

미군은 뻔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첫 현장 브리핑에서 고엽제의 존재 자체에 대해 아무 기록이 없다고 했지만 일주일 만에 미군이 제출한 공병대 보고서에서 에이전트 오렌지를 저장했다가 반출한 기록이 발견됐다.

2004년 조사 결과라고 공개한 부대 내 다이옥신 수치가 미국 환경보호청의 기준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자 3일 만에 그 수치를 1천 분의 1로 정정보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명박 정부는 반환된 미군기지 1백13곳에 대한 오염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이 부지들에 대한 국방부의 오염조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다.

한미중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오염을 신속하게 치유한다”고만 돼 있을 뿐 그 급박하고 실



사진 출처: MBC 뉴스 화면 캡처

1968년 비무장지대 주변에 고엽제를 살포하는 주한미군 미 제국주의의 또 다른 범죄로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질적인 위험이 무엇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우기면 그만인 것이다.

가장 어처구니없는 것은 미군이 우기기 전에 나서서 이들을 비호하는 이명박 정부다.

환경부장관 내정자이자 소망교회 신자인 유영숙은 때마침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군이 자국민 보호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군을 변호했다.

그러나 미군이 세계 곳곳에서 저지른 환경오염은 미국 정부조차 인정한 바 있다.

“1993년 미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방환경정화프로그램의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외국 기지를 포함한 미국기지 3천3백54곳에서 2만 2천5백9개 사이트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발표된 미국연방회계감사원 보고서에선 미군이 위험물질을 다룰 때에도 어떤 환경기준도 고려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정명희, ‘미군의 오늘을 필리핀에서 보다’, 녹색연합)

이명박 정부가 미군 측에 통보한 한국 측 조사단원에는 전직 국방부 환경과장이 포함돼 있는데, 현지에서 활동하는 녹색연합에 따르면 “민간전문가로 포장돼, 미국 측 입장을 대변하는 데 열심히 활동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지난 5월 23일 미군부대 방문시에도 미국 측 입장을 대변하다가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제지를 받은 적도 있다.”

고엽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에이전트 오렌지에는 TCD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물질은 식물을 말라죽게 하고 동물에게는 기형과 암을 유발한다. 몸속에 축적되고 태아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베트남 정부에 의하면 베트남전 당시 5백만 명 이상이 고엽제에 노출됐고 3백만 명 이상이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그중 최소한 1백만 명이 심각한 신체 장애를 겪고 있다. 베트남 적십자사의 자

료에 의하면 15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다이옥신의 유전 독성으로 5만 명 이상의 기형아가 태어났다.”(우석균, ‘베트남 전쟁의 또 하나의 피해자 : 베트남 참전 군인’)

평범한 한국인들의 생명을 위협해 온 주한미군은 당장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하고, 이런 사태를 조장한 SOFA도 개정돼야 한다. 더 나아가 환경 파괴뿐 아니라 이 지역의 불안정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근원인 주한미군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

장호중

나토의 아프가니스탄·리비아 무차별 폭격

이것이 ‘인도주의적’인가?

최근 나토 폭격기가 아프가니스탄 헬만드 주에서 두 대가족의 씨를 말려 버렸다.

나토 폭격으로 2명의 여성과 12명의 아동 등 14명이 죽었다. 이것이 바로 ‘인도주의적 개입’의 실상이다.

이웃들은 파괴된 건물 더미에서 시체들을 꺼내 야외에 뒀다. 그들은 죽은 사람들이 탈레반 전사들로 오해될 여지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려 했다.

같은 시기 나토군은 아프가니스탄 경찰 20명을 죽이는 ‘실수’를 저질렀다. 나토는 경찰들이 체복이 아니라 ‘현직’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나토군 14만 명은 모든 아프가니스탄인을 잠재적 적으로 여긴다.

버락 오바마는 최근 아프가니스탄이 ‘고비’를 넘겼고 서방군대가 ‘전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다. 그러나 이 인기 없고 값비싼 전쟁은 곤경에 처했다.

서방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하고 있고 나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점을 인정할 수 없다.

오바마는 올해 여름부터 철군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론은 다음 선거 전까지 영국군을 빼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군사령관들은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더 많은 민간인과 군대가 미

국 제국주의 계획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오바마는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지를 얻으려 한다.

지난 10년간 경험을 볼 때 이런 말을 믿을 이유는 없다.

가장 최신의 ‘인도주의적 개입’의 사례인 리비아에서는 불과 3개월 만에 그런 말의 공허함이 증명됐다.

게다가, 민주주의에 대한 서방 정부의 ‘걱정’이 바레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라.

수수방관

미군은 사우디아라비아 군대가 바레인에 들어가 바레인 민주화 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것을 보고도 수수방관했다.

영국군은 바레인에 파병된 사우디아라비아 군대를 훈련시켰다.

나토가 영국 공군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지하 벙커 파괴용 폭탄]을 사용할 것이란 소식은 리비아 개입을 정당화한 미사여구[민간인 보호]가 거짓말이었음을 여지없이 보여 준다.

이 폭탄은 콘크리트 더미를 관통하는데 사용된다.

나토 폭격을 피해 지하방공호로 대피한 민간인들은 더는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영국 국방장관 리암 폭스는 ‘이중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초기 형태의 벙커버스터는 1991년 바그다드 아마리아 방공호에 피신해 있던 민간인 1천 명을 죽였다.

리비아 보통 사람들도 이런 파괴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폭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리비아 해군의 모든 배가 침몰됐고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한 아파치 헬리콥터가 근거리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처음에는 리비아 혁명 세력이 카다피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듯이 보였다.

그러나 서방 국가가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리비아에 개입하면서 혁명의 성공은 주변으로 밀려났다.

서방 지도자들은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영국 특수부대와 CIA 첩보원들이 리비아 안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다.

최근 알자지라 보도를 보면, 영국 첩보원들이 미스라타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방 열강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이런 자들을 파견한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서방 정부가 과거 거래를 했지만 이제 효용성이 떨어진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서방 정부의 이익을 보호해 줄 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과연 ‘인도주의적’인지는 이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30년만에 분출한 네이멍구 몽골족의 반정부시위

한 몽골 유목민의 죽음에 중국 소수 민족 중에서도 제일 독립운동이 약했던 몽골족들을 저항에 나서게 했다.

내몽골 자치구는 중국 내에서 석탄과 희토류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라, 중국의 4대 공업도시가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석탄은 베이징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 ‘베이징의 발전소’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네이멍구의 경제 발전은 평범한 몽골족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했다. 중국 정부가 필수적인 자원이 있는 이 지역을 통제하고자 한족들을 강제이주시키면서 몽골족들을 쫓아냈고, 이익 역시 대부분 한족들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석탄개발 과정에서 유목민족인 몽골인들 삶에 필수적인 목초지는 파괴됐고, 유목민들은 도시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몽골 유목민 메르겐은 바로 이러한 탄광 개발로 목초지와 가족의 삶이 파괴된 것에 항의해 시위를 벌이다 석탄운반 트럭을 가로막았고, 한족 트럭 운전사는 그를 향해 돌진했다. “몽골족 목숨 몇 톨”이라는 망언까지 했다.

메르겐의 죽음에 분노한 몽골인들은 지난 23일부터 6일 동안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특히 24일엔 시린하오터시 정부 청사 앞 시위에 학생 등 2천여 명이 참가했다. 몽골족의 대규모 시위는 30년 만에 처음이다.

상당히 놀랍다. 내몽골은 몽골족의 인구가 20퍼센트 이하고, 중국 정부가 독립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공산당에 협력한 몽골족’들을 미화하는 영화를 만드는 등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유학 시절 내가 만난 외몽골인은 “내몽골의 몽골족들의 민족의식이 매우 낮다” 하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텐안먼

한편 중국 정부는 이집트 혁명처럼 이 시위가 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히 억압하고 있다. 내몽골 전 지역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제하고 수도인 후허하오터우에 공안과 무장경찰을 파견하고 시위대를 체포하고 있다. 특히, 6월 4일 텐안먼 항쟁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 경계하는 듯하다.

물론 중국 정부는 강력한 국가통제력으로 ‘저항’을 진압하는 데 성공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제 위기와 온갖 차별로 억눌려 왔던 중국 인민들의 저항을 완전히 막지는 못할 것이다.

1989년 텐안먼 항쟁 당시에 당시 억압받던 위구르족 학생들이 항쟁지도부에 같이 참가해서 중국 정부에 저항한 것처럼 투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민족 간 차별 정서가 사라질 수도 있다.

김재원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학생

이집트

군부의 제동을 넘어서 전진하는 혁명

사이먼 아사프

최근 헌병이 활동가들을 무차별로 고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집트 집권 군사위원회에 맞선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 5월 27일에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집트 혁명을 대변하는 주요 인사인 호삼 엘하말라위는 군사법정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그 직전에 그는 TV에 출연해 활동가 고문에 책임이 있는 고위 군장교의 이름을 언급했다.

하말라위는 자신이 체포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대신에, 군재판소는 기존 관행을 깨고 하말라위에게 고문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군부가 한판 붙자고 나선 것이다.

5월 27일 대규모 시위는 군사위원회에 직접 도전한 것이었다. 시위대는 민간 위원회가 군사위원회를 대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사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조정하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 통하는 라파 국경을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등 몇 가지 양보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활동가들에 대한 야만적 탄압을 병행했다.

그들은 양보 조치가 혁명의 발전을 가로막기를 바랐다.

공격

이집트 군부는 호스니 무바라크 독재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야당세력이었던 무슬림형제단 지도자들을 동맹으로 삼았다.

무슬림형제단은 사람들에게 5월 27일



반혁명 군부에 항의하는 이집트 민중 시위대

시위에 참가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시위 참가자들을 비난했다.

군부는 시위 참가자 수가 작으면 혁명가들을 탄압할 기회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이날 시위는 올 1월 혁명이 시작된 후 벌어진 시위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 중의 하나였다.

그러자 무슬림형제단 지도자들은 청년 회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무슬림형제단 청년 회원들은 느린 변화 속도와 갈수록 헌병이 잔인해지는 것에 큰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무슬림형제단 지도자들은 혁명청년동맹에 파견된 무슬림형제단 청년 대표들

이 자신들의 명령을 어기고 5월 27일 시위에 참가하자 이들의 대표권을 박탈했다.

혁명청년동맹은 1월 혁명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했다.

또, 무슬림형제단 지도자들은 시위대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슬림형제단 웹사이트의 저명한 에디터를 해고했다.

이집트 군부는 청년 지도자들을 회유하려 했다.

헌병에 체포된 여성들이 모욕적인 ‘처녀성 테스트’를 당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군부는 “1월 25일 혁명에 참가한 모든

청년 연합과 군사위원회가 조우”하는 행사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헌병이 옛 보안군을 대신하는 탄압 기구로 변신하고 있다.

민간 법정에서 무바라크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벌금을 받고 중형 선고를 받는 동안,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무너뜨린 무바라크 정부의 긴급법을 근거로 삼아 군사법정이 자신들을 탄압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군부는 혁명이 끝났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5월 27일 시위는 혁명이 여전히 진행 중이란 점을 증명했다.

계속되는 시리아·예멘 항쟁

튀니지와 이집트 혁명에서 영감을 얻은 아랍 항쟁 물결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튀니지나 이집트와 비슷한 성공이 아직 다른 곳에서 재연되지는 않고 있다. 시리아와 예멘에서 거대한 운동은 갈수록 잔인해지는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시리아 보안군은 1천 명을 죽이고 1만 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운동은 지속되고 있다. 예멘 대통령 알리 살레가 민주화 시위를 파괴하려 하면서 예멘의 힘센 부족들이 무장 반란을 일으키고 군대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탄압에도 저항세력이 굴하지 않는 것은 시리아와 예멘 혁명 세력이 얼마나 용감한지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양자 혁명에서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즉, 튀니지와 이집트 혁명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던 노동계급의 조직적 저항이 빠져다.



호삼 엘하말라위에 연대를 보내자

호삼 엘하말라위는 1월 혁명 후 국가 보안청 건물에서 압수한 무바라크 비밀 경찰 사진 수백 장을 공개했다.

그는 헌병에 체포된 사람들이 당한 일들에 관한 증언을 수집하고 있었다.

그는 최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렇게 말했다. “민간인을 군사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은 중단돼야 합니다.

“군부가 이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한 뒤부터 그런 사례가 5천~8천 건이나 있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무바라크와 그 일당들은 민간인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진행자인 레임 마케드와 언론인 나빌 샤라프 엘던도 소환됐다.

지지 메시지를 보낼 곳: menasolidarity@gmail.com

오바마의 ‘새 중동정책’

아랍 혁명을 가로채려는 꿈수

조너선 닐 반제국주의 활동가.

《오바마의 아프파к 전쟁》(책갈피의 공저자

5월 26일 버락 오바마는 중동에 관한 연설을 했다.

그는 미국 외교 정책을 크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랍 반란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이 반란을 미국 혁명과 민권 운동에 비교했다.

오바마가 하려는 일을 이해하려면 그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은 오바마가 잠시 길을 잃은 팬츠는 자유주의자라고 여긴다. 그가 똑똑하고 세련되고 조지 부시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미국 자본주의의 지도자로 세계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자 미국 제국 사령관이다.

대선 당시 그에게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자들은 죄다 월가 인사들이었다. 그는 월가 인사들을 정부에 등용했고 군부 인사들을 외교직에 임명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었고 파키스탄을 폭격하고 기후 변화에 맞선 전 세계 공통의 합의안을 도

출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그는 여전히 미국 지배계급이 가장 선호하는 차기 대선 후보이기도 하다.

오바마 당선으로 미국인들은 자신이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것은 중요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자기 계급에게 유리한 전략을 추구한다. 오바마는 미국 지배자들의 최대 자산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오바마가 한 연설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지금 중동에서 큰 곤경에 빠져 있다.

그들은 지난 50년 동안 석유를 통제하려고 이 지역 독재자와 이스라엘을 후원해 왔다. 아랍 반란이 폭발했을 때 미국 정부의 첫 반응은 독재자들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미국 정부는 이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려 한다. 그들은 여전히 이 지역 석유 자원을 통제하려 한다. 그러려면 그들은 이 지역 민중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지고 있고 파키스탄에서는 미국 정

부에 반대하는 투쟁과 분노가 성장하고 있다. 미국 제국은 이른바 ‘아프파к’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정책을 바꾸려 한다. 그들은 승자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새로운 대통령 선출에 개입하고 ‘아랍 거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힐러리 클린턴은 이 일을 할 수 없다. 오바마가 좀더 적임자일지 모른다.

모순

리비아에서 미국 정부는 민중 반란을 자기 통제 아래 두는 데 성공했고 미국이 중동을 폭격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이집트에서 미국 정부는 이집트 군부에게 호스니 무바라크를 제거하라고 권고했다. 지금 미국 정부는 이집트 민중 운동이 아니라 이집트 군부를 지지하고 있다.

오바마는 또한 자신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탄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그가 말한 것 중 기존 미국 정책에서 벗어난 것은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리 벤야민 네타냐후는 오바마가 말한 방식에 분노를 토했다.

오바마는 자신이 네타냐후와 격론을 벌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점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미국의 이스라엘 지지는 오랫동안 아랍인들의 분노를 샀다. 지금 이 지역의 세력 균형은 이스라엘에 불리하게 바뀌고 있다.

물론,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다. 아랍인들이 미국을 중립적 존재로 보기를 바라는 것이다.

오바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국왕도 오바마 연설을 듣고 노발대발했다.

미국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부자, 기업, 경찰, 군인과 고문하는 자를 보호하는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모순에 처했다. 미국은 아랍 민중이 석유 자원, 경제와 외교 정책을 통제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지금 중요한 것은 독재자를 지지하지 않는 대신, 독재자를 제거한 후 남은 지배자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말과 행동은 서로 어긋날 것이다. 사실, 어떤 행동은 다른 행동과 모순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운동에 대한 탄압을 지지

하면서 비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제력을 잃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너무 멀리 나갈 수도 없지만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다. 오바마는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이다.

오바마의 미사여구는 많은 정치인의 호응을 얻을 것이고 일부 아랍인들도 오바마가 변화를 지지하기를 바랄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여전히 옛 동맹과 탄압 기구들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아랍인들은 명칭하지 않고 독재자가 물러난 뒤에도 실업, 굶주림과 불의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랍의 반란과 계급투쟁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사실, 오바마 연설에서 가장 주목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오바마, 클린턴과 국무부 관료들은 예멘과 시리아 항쟁이 승리할 뿐 아니라 더 퍼져 나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용욱

반자본주의의 연재 ④

기후변화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같은 책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레포트21〉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연재를 싣는다.

- ①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 ② 시장은 효율적인가
- ③ 금융화와 금융자본만이 주된 문제인가
- ④ 기후변화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 ⑤ 국가가 시장의 광기를 통제할 수 있는가
- ⑥ 왜 전쟁은 왜 끊이지 않는가

재생에너지, 대중교통, 단열이 잘 되는 주택, 이 세 가지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술들이다.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그러나 풍력과 태양 에너지만으로도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몇 배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재생에너지의 유일한 단점은 공급이 일정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에너지 분배 단위를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재생에너지를 혼합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미 독일 과학자들은 수년 전에 서유럽과 지중해 해안에는 풍력발전을, 북아프리카와 중동 사막에는 태양광과 태양열 발전 시설을 지어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는 계획(TRECO)을 제출했다. 미국과 유럽이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한 달 동안 은행에 쏟아부은 돈만으로도 이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다.

교통 부문 역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아무리 연비가 좋은 최첨단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도 한꺼번에 수십~수천 명을 태우고 다니는 버스나 기차보다는 온실가스를 훨씬 많이 배출한다.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편안하도록 대중교통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

안전하고, 적어도 대도시와 교외 지역까지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복선으로 만들고 일반과 급행열차를 섞어서 승객을 적절히 분산시켜야 한다. 아이들과 함께 타도 불편하지 않도록 집 근처에 정류장이 있고 환승이 쉬워야 하며 별도의 가족용 공간도 보장돼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값싸게, 가능하면 무상으로 해야 한다. 부자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대중교통이 만년 '2등' 취급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대중교통에서 벗어나기를 고대할 것이고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정리해고와 직장폐쇄에 맞서 싸우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재생에너지로의 대규모 전환은 노동자들의 삶도 지키고 지구도 살릴 수 있는 대안이다.

때문이다.

최종 소비 형태로 분류했을 때, 난방은 단일 분야로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모든 나라가 북극에 가까운 북유럽 국가들처럼 열이 새지 않도록 건물을 짓는다면 난방 부분에서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싼 값에 이런 집들을 보급하려면 건설

회사들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주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NGO들조차 이런 제안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석유와 자동차 기업들이 정치와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려고 돈을 퍼붓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이지 않고도 기후 재앙이 도래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더 비현실적이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에 미칠 충격,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예컨대 자가용 생산을 규제하면 자동차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쓸데없이 크고 비싼 승용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대중교통 수단들을 생산하도록 한다면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지키고 지구도 구할 수 있다. 오히려 대대적인 교통 개편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이는 발전 산업이나 건설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운동이 체제의 핵심부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동자들을 이간질시킨다. 일부 노동자들은 화석연료 경제로부터 혜택을 입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최근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야노동 반대 투쟁은 탄소 경제의 핵심부에 있는 노동자들도 착취당하고 고통받기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보여 줬다.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노동자들도 화석연료 경제로부터 혜택을 받기는커녕 실질임금 하락과 살인적인 노동강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은 자본가들과 그들의 후원을 받는 정부다.

따라서 기후정의 운동은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결돼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런 요구를 내걸고 기후정의 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도록 고무해야 한다.

자본주의가 세계 체제고, 기후변화가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마르크스의 말은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운동에서도 절실한 구호다.

김종환

전기 사용을 줄이면 핵발전을 멈출 수 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6월 9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공동행동’에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뿐 아니라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 다함께 등 수십여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 핵발전소 폐쇄’, ‘핵 정책 전환’을 공동 목표로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환경단체들은 핵발전을 없애기 위한 ‘시민실천’ 캠페인을 공동행동의 주요 과제로 채택하자고 주장한다.

공동행동이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을 조직하는 기구가 되려면 시민과 노동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들이 특별히 ‘시민실천’을 강조하는 까닭은 대중적 항의행동이 아니라 집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이다. 예컨대 ‘집집마다 전기를 1퍼센트 줄여 핵발전소 하나 폐쇄하기’ 같은 선언 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시민단체들 대부분이 이런 에너지 절약 운동을 지지한다. 그렇다고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은 아니다. 이런 운동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정부와 기업에 무언가를 요구하려면 으레 뒤편따라야 할 미사여구 정도로 여긴다.

이런 태도는 첫째, 환경 파괴의 원인을 사회 구조가 아니라 개인의 이기심 따위에서 찾는(보통은 둘 다 원인이라고 말하지만) 자본가들의 관점을 수용하는 데서 비롯한다. 둘째, 따라서 환경 파괴를 막는 것은 특정 집단이나 계급 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개인의 반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성인군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현실에서는 선거 등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합의를 유일한 대안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어떤 전기를 사용할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 역대 정권 중에 어느 정권도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핵발전에 투자할지 재생에너지에 투자할지 대중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 4년 혹은 5년에 한 번씩 투표할 때 주어지는 선택의 기회만으로는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무기력하고 온건한 방식이 에너지 절약 선언 운동이라면, 오만하고 적대적인 버전은 전기 요금 인상론이다.

지난 5월 30일 〈프레시안〉에 쓴 칼럼에서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전력 낭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 일종의 기조경제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지만 “우리 국민은 전력을 물 쓰듯 하고 … 에어컨을 사느라 법석을 떨고 있다” 하며 평범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심지어 이명박의 ‘녹색성장’이 “전기요금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시민 실천?

그러나 첫째, 이명박의 ‘녹색성장’은 핵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이정전 교수는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둘째, 전체 전기의 절반 이상(52.5퍼센트)을 사용하는 기업주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평범한 노동자·농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상식에 비춰 봐도 공평하지 않다. 〈조선일보〉조차 “가계가 아니라 산업부문의 전력 과소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말이다. 게다가 “산업용 요금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내는 요금으로 제조 대기업을 지원하는 꼴이 되고 있다.”

셋째,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가정용 전기 요금이 싸기 때문에 낭비가 많다는 애

기는 하나마나한 얘기다.

가정에서 소비되는 전기는 대체로 삶에 필수적인 것들이고, 낭비되는 전기가 있다고 해도 ‘무절제한 생활’이 아니라 가전제품의 전기 효율이 낮은 것이 문제다. 대기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들이 개발돼 있지만 정부는 건축업자들에게 이를 의무화하지 않는다. 단열을 개선하는 건축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 전열 기구를 사다 쓰라고 부추긴다. 그렇게 해도 한국의 주거부분 전력 소비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평범한 노동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정용 전력 소비를 줄여서 핵발전소를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은 몽상에 가깝다. 이윤에 눈먼 기업주들과 그들의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들의 결정을 바꿀 힘을 가진 강력한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최근 독일 정부 등이 핵발전 중단을 말하는 것은 수십만 명이 참여한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전기 절약을 촉구하거나 더 나아가 전기 요금을 인상하자는 주장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이런 대중 운동을 건설하는 데 치명적인 결립물이 된다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환경운동가들의 전기 절약 캠페인에 냉소를 보내거나 불만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능해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데다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반값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실사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그 결과는 정부와 자본가들의 억압적 정책과 고통을 감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정부와 자본가들에 항의하는 행동에 나서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선거를 유일한 현실적 대안으로 여기다 보니 주로 정부의 정책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것을 분석하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정’ 과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전문가적’ 활동을 ‘대중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환경운동가들은 무기력하게 정부와 싸우고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못지 못할 분리가 생긴다.

공동행동이 이런 모순에서 벗어나려면 평범한 노동자들과 함께 거리와 직장에서 정부와 기업주들에 맞서는 투쟁을 중심으로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장호중

인민전선의 역사적 경험에서 배운다 ④

해방 직후 좌우합작과 민족통일전선론의 비극

지금 대다수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대연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노동계급과 자본가 자유주의 세력의 체계적인 계급 협력을 가리키는 인민전선의 한국판이다. 그러나 지난 역사에서 인민전선은 모두 비극적이거나 우울한 결말을 맞이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험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해방 정국의 조선을 다룬다.

해방 이후 한국은 온갖 모순이 중첩돼 왔다. 그중 하나는 제국주의 세력이 한반도를 분단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좌익과 우익은 각각 소련과 미국의 힘에 편승하려 했고, 결국 이것이 통일된 독립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게 했다는 인식이 광범하다.

이런 인식은 통일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면 좌익과 우익이 협력을 해야 하고, 모든 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민족적 대의 앞에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여전히 한국이 분단 국가라는 사실이 해방 당시 좌우합작과 계급협력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주장을 꽤 설득력 있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생각은 아마 상식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오늘날 당시 여운형의 좌우합작 운동을 지지하는 정치적 스펙트럼은, 대다수 자우파, 좌파 민족주의자(대표적으로 서중석 교수), 진보신당의 일부 PD 이론가(장석준)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다.

그러나 당시 좌우합작과 민족통일전선론으로 표현된 계급협력 노선은 결과적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격렬한 좌우 대립, 특히 공산당의 '비타협성'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그러나 분단을 저지하고, 친일·반동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경제적 모순을 과감하게 개혁하는 데 좌우합작과 계급협력이 효과적이었을까? 사실, 당시 역사는 오히려 계급협력과 민족단결 논리가 이런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겠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조선은 식민지에서 해방됐다. 식민지 시절 억눌렸던 조선 민중은 새로운 독립국가에서는 마땅히 과거 일제에 부역했던 자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민중은 새로운 독립국가가 정치적으로 자주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오랜 사회 경제적 모순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군산 종연조선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방은 누구를 위한 해방 ... 이냐? 노동자에게서 직장을 빼앗고 뺨을 주지 못하는 독립이라면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의의가 있으랴. ... 노동자 대중에게 완전한 해방을 가져오는 그날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기를 여기에 맹서한다.”

스탈린의 국제 노선

그들은 이런 과제를 누가 대신해 줄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공장과 작업장을 접수해 스스로 운영하려 했다. 일본인 소유 작업장은 물론 친일 조선인 자본가 소유의 작업장도 접수 대상이었다. 가혹한 식민지 소작제에 시달렸던 소작농민들도 대지주에 맞서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일본을 대신해 조선을 점령한 미국과 소련 양대 제국주의는 조선 민중이 스스로 민족 독립 국가를 건설할 권리를 부정했고, 노동자와 빈농이 급진화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도 않았다.

안타깝게도 당시 좌파들은 제국주의적 점령에 맞서 저항하지 않았다. 여운형 등의 중도좌파든 공산당이든, 거의 모든 좌파들이 제국주의 세력을 활용해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조선공산당은 당시 스탈린의 국제 노선에 충실했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 미국과 소련의 전후 세력권 조정 협상은 끝나지 않았고, 이를 위해 소련과 미국의 '협력' 관계는 일정 기간 유지됐다. 따라서 각국의 공산당들은 이 협력 관계를 해칠 급진적 주장과 실천을 회피해야 했다.



1946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 미국 대표와 함께 있는 여운형
해방 정국에서 좌파들은 제국주의 세력에 기대 독립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

스탈린의 국제노선을 따라 조선공산당은 당면 혁명의 과제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제한했다. “조선의 객관적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하고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제 과업의 수행을 강경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요 조선에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단계는 아직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힘있게 주장한다.”

조선공산당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힘에 의존한 것도 아니었다. 조선공산당은 당시 미국과 소련의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고, 이 국가가 수행할 각종 개혁 조치들을 미국과 소련이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스탈린-루즈벨트의 국제혁명 노선’ 덕분에 “조선과 같은 데에 있어서는 평화적으로 혁명의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공산당은 소련군만 아니라 미군도 “해방자”로 환영했다. 미국을 “우리 민족의 직접 원조자로서 해방자로서 ... 우리의 역사에 빛날” 것으로 칭송했다.

조선공산당은 새로 건설될 국가는 좌우합작, 민족통일전선, 즉 계급연합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언제든가 민족적 범죄자인 친일 분자만을 제하고는 누구든지 환영한다.”

그래서 조선공산당은 이승만을 그들이 선포한 인민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삼으려 했다. 심지어 공산당은 자신이 ‘반동적 민족자본가’로 규정했던 김성수를 내각에 영입하려고까지 했다.

이승만은 공산당의 제안에 단칼에 거부했다. 오히려 공산당에게 해충단결을 해칠 행위는 하지 말라고 훈계했다. “급격한 분자가 선두에 나서서 농민이 추수를 못하게 하고 공장에서 동맹파업을 일으키는 일도 있다... 국체를 회복하여 국토를 찾자는 일점에 대동단결치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공산당은 합작의 파트너를 김구로 바꿨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조선공산당이 민족 단결을 내세우며 우파와 ‘상층 통일 전선’을 추구하는 것에

노동자·농민 운동 지도부도 보조를 맞췄다. 당시 노동조합 전국조직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와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 지도부는 공산당이 통제했다. 전평은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데서 계급대립이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1)도시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요, 2)농촌에서 농민과 지주의 대립이다. 이 두 모순을 잘 조정하는 것이 통일전선의 기초를 쌓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평은 투쟁을 자제하고 “양심적 민족자본가”와 협력해 생산에 힘쓰라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의 공장관리운동 역시 급진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기보다는 자본가와 공동관리를 강조했다.

해방 직후 분출했던 농민들의 토지 접수 시도는 제지됐다. 또, 공산당은 “일제 및 비친일적 대지주에 대한 소작료 불납 투쟁을 극좌적 오류”라고 규정해, 농민운동을 소작료 인하 운동으로 억제했다.

투쟁 자제

민족통일전선을 위해 계급 대립을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일종의 자기기만이었다. 자본가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일제시대 조선인 자본가들은 일본 제국주의 질서에 편승하거나 통합돼야만 자본을 모을 수 있었다.

조선인 자본가들은 해방 뒤 친일잔재 청산이라는 대중의 요구가 필연적으로 자신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위협할 것임을 거의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이를 막아 줄 미군정과 우익 폭력집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트로츠키는 스페인 혁명의 경험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조선공산당의 계급연합 추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매우 놀라운 것은 스페인 인민전선은 실제로 힘의 사변형조차 없었다는 사실이다. 자본가계급의 자리에는 그 그림자뿐이었다. 스페인 자본가계급은 스탈린주의자,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를 매개로 인민전선에 참

여하라고 귀찮게 조르지 않고도 노동자 계급을 자신에게 종속시켰다. 온갖 정치적 색조를 띤 착취자들의 압도 다수는 공공연하게 프랑코 진영으로 넘어갔다.”

따라서 공산당과 전평이 추진한 민족통일전선은 사실상 공산당 지지 세력의 결집체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공산당이 민족자본가의 그림자와 연합을 하려는 동안, 미군정과 우익들은 노동자와 빈농의 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해방 직후 궁지에 몰려 있던 친일·반동 세력들은 미군의 점령과 이에 편승한 우익 폭력, 그리고 좌파의 계급타협 정책 덕분에 숨을 돌릴 여유를 찾았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 등장할 분단 국가에서 좌익과 민중운동을 절멸시키리라 결심했다.

조선공산당의 태도는 1946년 7월 들어 변한다. 이른바 ‘신전술’ 채택이다. 즉 그동안 미군정과 우익의 폭력에 대한 최소 저항 노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방어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산당이 신전술을 채택했다고 해서 미국과 전면적으로 대립하거나, 좌우합작을 원천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공산당은 여전히 소련과 미국 간 협의(미소공동위원회)에 매달렸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국 최종 결렬됐을 때, 공산당의 운명은 거의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미국과 우익은 자신들의 분단 국가를 위협할 모든 잠재 세력을 문자 그대로 척결하려 했다. 공산당은 뒤늦게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해 보지만, 세력균형은 이미 매우 불리했다. 공산당의 협조 노선 와중에 노동자, 농민 운동은 탄압으로 상당히 약화됐고, 분단이 기정사실이 되자 상당수 대중은 낙담하고 사기가 떨어졌다. 1948년 제주도에서 벌어진 항쟁은 고립됐고, 미국과 이승만은 주민들을 대량 학살했다.

당시 좌우합작론과 민족통일전선론의 근본적 모순 중 하나는 양대 제국주의에 대한 의존이었다. 여운형과 같은 온건 좌파든, 공산당이든 그들의 프로젝트는 결국 미국과 소련의 협상에 근거한 것이었다. 미국과 소련이 갈라섰을 때, 그들의 노선은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좌우합작론과 민족통일전선론에서 더 중요한 모순은 그것이 계급투쟁을 억제하는 구실을 한다는 점이다. 당시 좌파들은 민족 독립국가 건설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계급투쟁을 부차화했다. 이는 민족국가 건설과 계급투쟁을 분리시킨 것이다. 국가 건설은 좌우 합작을 통해,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협상에 따라 건설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계급투쟁을 억제하는 논리는 결국 미군정과 우익을 강화했을 뿐이었다. 좌파가 계급투쟁을 억제하는 틈을 타 우익은 세력을 결집시켰고, 친일 반동 세력은 전열을 재정비했고, 미군정은 각종 노동자 민중 조직을 파괴할 수 있었다.

결국 당시 민중이 요구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좌우합작과 계급협조는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먼저, 통일 국가 건설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소련 점령군에 맞선 투쟁이 필요했다. 둘째, 친일 잔재 청산과 사회 경제적 개혁을 위해서는 조선인 자본가와 대지주, 그리고 우익에 맞선 투쟁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았다. 특히 남한에서 친일 반동 우익 세력은 미국 제국주의에 밀착했고, 미국은 이들을 비호했기 때문이었다. 좌우합작과 민족통일전선론은 이런 과제를 아래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대안(즉, 연속혁명)을 봉쇄하는 데 일조했을 뿐이다.

한규한

민족통일전선을 위해 계급 대립을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일종의 자기기만이었다. 자본가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

최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사됐다. 이 경사스러운 일을 두고,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 그들은 말한다. 도대체 학생들 교육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학생에 대한 폭력은 통제의 수단일 뿐 절대로 교육이 아니라고.

타자에 대한 비판에 앞서 나 자신이 과거에 했던 잘못을 먼저 철저하게 반성한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했다. 나는 손으로 직접 때리지 않으니가 학생들이 모욕감을 느끼진 않을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매가 필요하다고,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집에서도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었드리게 해놓고 엉덩이에 매질을 했다. 나름대로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의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였는데 지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를 계기로 체벌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확산돼야 한다.

금 생각하면 나의 무지함에 고개를 들 수 없다.

절대로 된 교육은 인간화 교육이다. 인간화 교육을 하려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정신분석학 서적을 탐독하며, 진보적 신학자의 책을 읽으며, 인간에 대한 나의 이해가 잘못됐을

을 깨달았다.

체벌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기고, 그 충격은 본인은 느낄지 못할지라도 평생 그들의 인생에 악영향을 미친다. 폭력을 직접 당한 학생들은 물론이거나 그로 인해 조성되는 공포 분위기는 폭력을 직접 당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폭력으로 작용한다.

권위와 권력에 굴종하는 순응적인 인간을 만들어낼 뿐이다.

학교가 체벌과 같은 폭력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힘들게 설득하지 않고, 길게 상담하지 않고, '매'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뿐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 중에는 성경을 들먹이며 체벌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어린이, 여성, 성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 그 책에 들어 있다. 그 책을 절대시하지 마시라. 인간이 쓴, 편견과 아집이 함께 들어있는 책이다.

현장의 교사들은 말한다. 도대체 정도가 심한 문제아들은 어떻게 다뤄야 하냐고. 체벌이 아니면 그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적어도 진보적 교사라면 소위 문제아라 불리는 아이의 문제는 그 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을 것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이인범 교사

〈레프트21〉 재판 방청기

“심장이 쿵쿵 뛸 정도로 나를 고무했다”

서초동 법원에 도착해서 재판정으로 들어가 6인의 동지들을 보는 순간,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 매우 보기 좋았다. (권력기사 2면)

검찰 측 증인이 나와서 증인신문 받는 데 정말로 가관이였다. 증인이라고 나온 사람은 경찰에게 신상정보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를 증인으로 세웠는지 모르겠다며 처벌이 무서워서 나왔다고 말했다.

김지태 동지가 첫째로 나와 최후진술을 할 때 나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오십 평생을 살면서 재판정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을 보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전에 노동조합원들이 받는 재판에 몇 번 참석했지만 판사가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도 허리를 굽히고 고맙다며 재판을 마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김지태 동지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공격은 언젠가 부메랑이 돼 정확히 자신의 정치적 심장으로 향할 것”이라고 할 때에는 나 자신의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최후진술을 마칠 때는 방청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지태 동지에 이어 다른 동지들도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 언론 탄압, 노동자 탄압 등을 통렬히 비판하며 최후진술을 했다.

동지들의 자신감에 깊은 신뢰와 무한한 동지애를 느꼈다.

정권의 시녀 구실을 하는 검찰은 얼굴이 빨개져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이를 보는 나의 가슴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른다.

판사는 최후진술을 하지 말고 서류로 제출하라고 했지만 우리 동지들은 이를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최후진술을 마쳤다. 조익진 동지가 재판정이 떠나갈 정도의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최후진술을 할 때 판사가 제발 좀 작게 해달라고 사정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방청했다면 당당함과 자신감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레프트21〉 판매자 6인의 당당함에 무한한 박수를 보낸다.

박재순

유성기업 파업을 통해 깨달은 국가의 본질

5월 27일 열린 유성기업 파업 집회는 내가 태어나서 두 번째로 참가한 집회다.

경찰들은 시위대가 공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충청남도 아산의 한적한 시골 마을은 한순간에 격렬한 계급투쟁의 현장이 돼 버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노조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공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대열 맨 앞에 있던 유성기업 조합원들이 공장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지나자마자 경찰이 행진을 잘랐다. 유성기업 소속이 아닌 사람들은 공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래서 우리는 터널 안에서 경찰

들과 대치했다.

하지만 유성기업 노동자들도 용역강패들에 막혀 노조사무실을 방문하지 못하긴 마찬가지였다.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방문은 합법적인 일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법이 정말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인가?

이 집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유성기업 조합원 아내의 연설이었다. 그녀는 지금껏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로 여겼지만, 조합원들을 차에 치어 죽이려고 했던 용역강패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을 보며 경찰이 누구의 편인지 너

무도 분명하게 알게 됐다고 한다.

한 노동자의 연설도 인상적이었다. 최소한의 건강권을 위해서 야간노동을 거부하는데 이런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국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했다. 나는 노동자 의식이 투쟁을 통해 급진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보수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지적능력을 비하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무시하지만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직접 작업현장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경험하며 투쟁에 나섰고 그들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줬다.

크리스 하먼이 쓴 《세계를 뒤흔든 1968》의 한 대목이 생각났다. 1968년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 시카고에서 반전 시위대가 경찰 폭력을 경험하고 나서 모두 혁명가가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는 대목이다. 유성기업 파업 노동자들도 집에 돌아갈 때는 국가와 경찰의 구실을 분명하게 이해할 것이다.

이윤을 우선하는 비인간적인 자본주의가 끝나지 않는 한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와 경찰의 폭력을 계속 겪게 될 것이다.

강병호

서규용이 농림수산부 장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

나는 면사무소에서 농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허술해 돈만 있으면 누구나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후보자 서규용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 8년간 농지를 직접 경작하게 되면, 해당 농지를 매매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년간 경작여부는 보통 농지원부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농 지 원 부 는 경 작 하 는 자 가 읍 · 면 · 동사무소에 농지원부 작성 신청을 해야 만들어진다. 그런데 “농지원

부리” 신청한 적도 없고,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봤다”면서 양도세 감면혜택까지 받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서규용은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하기도 했다. 쌀직불금 역시 경작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서규용의 형 외에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이런 범법자가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들을 관장하는 부처의 수장이 되겠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법과 원칙’은 오로지 힘없는 자들에게만 ‘정직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면사무소 농지업무 담당공무원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공개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다함께 서울 동부 공개 포럼
마르크스주의, 자율주의, 아나키즘 –
운동에서 리더가 필요한가?
연사: 한규한 (다함께 활동가)
일시: 6월 8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모임공간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대강의실
(건대입구역 6번 출구, 광진구 자양4동 13-42호 3층)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447-0397, 010-9910-2021

다함께 서울 남부 공개 포럼
사회주의 – 좋은 사상, 그러나 가능한가?
연사: 설의 중
일시: 6월 16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모임전문공간 모토S실
(강남역 8번 출구 20미터 강남제일빌딩 8층)
참가비: 4천 원
문의: 02-416-0963, 010-2401-1987

다함께 서울 서부 공개 포럼
국가란 무엇인가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연사: 차승일 (계간 《마르크스21》 편집위원)
일시: 6월 9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가톨릭 청년회관 CYC 4층 (충대입구역 2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324-3400

다함께 서울 중북부 공개 포럼
유로존의 위기와 긴축 반대 투쟁
연사: 이정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교수)
일시: 6월 16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해학역 4번 출구, CGV 옆 건물)
참가비: 2천 원 (음료 제공)
문의: 070-8113-8541, 010-8033-7822

다함께 경기 남부 공개 포럼
복수노조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연사: 김승섭 (전국건설노조 경기도 건설지부 대의원)
일시: 6월 16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민주노총 경기본부 중회의실
(수원역 앞 수원세무서 방향 도보 10분 경기간호학원 옆 골든프라자 5층)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6663-0032

다함께 서울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forum
서울 광진구 중곡4동 93-49 2층

다함께 서울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west.atg@gmail.com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다함께 서울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at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nambu_forum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다함께 서울중북부지구
연락처: 070-8113-8541 jball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jbforum
서울 종로구 송인2동 201번지 13호

서평 |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데이비드 하비, 강신준 옮김, 창비, 28,800원, 627쪽)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탐험을 위한 길잡이



간단히 말해 지난 30년은 마르크스주의 사상과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시기가 아니었다. 1989년 동구권 붕괴와 냉전 종식 후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승리하는 듯이 보이면서, 마르크스주의 사상은 학계와 대중적 논의에서 주변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2007년 말 금융위기가 폭발하면서 구도는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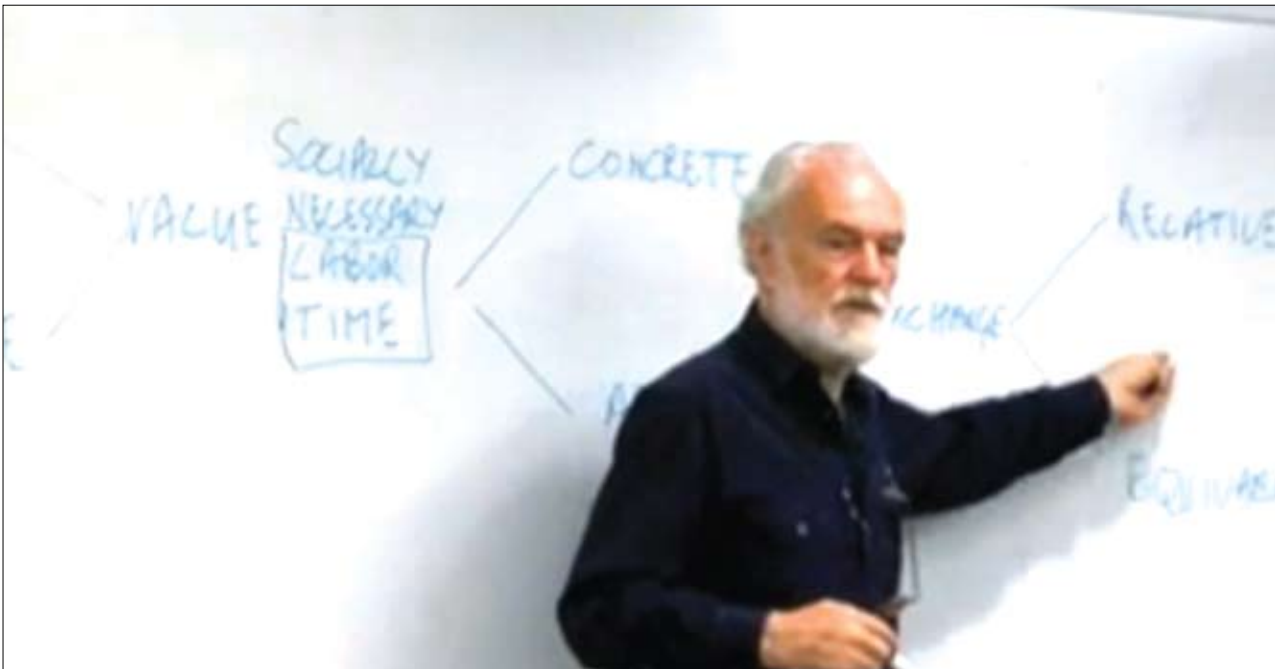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 경제 위기로 확산되면서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사람들은 당면한 위기의 원인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 동시에, 그들은 해결책도 알고 싶어 한다.

〈타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혁명의 예언자들이 사방에 나타났다. 자본주의 비판자들이 돌아왔다.”

마르크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보여 주는 증거로, 마르크스 저작, 특히 그의 걸작 《자본론》 독서 모임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다.

그러나 《자본론》을 완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이가 《공산주의자 선언》을 짧고 탁월한 글로 여기고 아마도 마르크스 저작 편집본을 읽어보지만 보통 《자본론》을 읽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일단 엄청난 양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복합적인 마르크스 방법이나 개인적 스타일을 고려하면 더 읽기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큰 인기를 누린 데이비드 하비의 영상 강의 중 한 장면 그의 강의는 많은 청년들에게 마르크스의 이론을 탐구할 자신감을 줬다.

데이비드 하비는 오늘날 가장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 중 한 명이다. 그는 이런 명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 급진적 교수들 중 복잡한 사상을 그만큼 명료하게 설명하고 당대의 문제를 그만큼 천착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자본론》 강연을 통해 갈수록 늘어나는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려 했다. 이제 그 강연 내용이 책으로 출간됐다. 제목을 보면 추측할 수 있듯이, 하비는

독자가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세계를 탐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 책을 썼다.

하비보다 이 일을 더 잘할 학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비는 원래 급진 지리학자이자 사회이론가였다. 동시에 그는 40년 동안 《자본론》에 관한 많은 글을 쓰고 강연을 했다.

이 책은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론》 강연록을 기초로 삼고 쓰였다(영어 강연록과 동영상은 davidharvey.org에서 볼 수 있다).

하비의 책은 어떻게 마르크스의 책을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 책은 우리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이해하고 왜 위기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특징인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하비 특유의 차분한 스타일로 쓰인 이 책은 그의 다른 글들처럼 독자의 사고를 자극한다. 이 책은 마르크스가 1백50년 전 기초를 닦은 방법을 사용해 오늘날 자본주의 위기의 모순을 파악하려는 독자들에게 대단히 유용하다.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 경제 위기로 확산되면서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사람들은 당면한 위기의 원인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

연속혁명 ③

오늘날의 연속혁명

아랍 혁명은 연속혁명으로 발전할 때 혁명이 제기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연속혁명 연재 마지막 글에서 에스미 추나라는 오늘날에도 연속혁명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사실들을 역지로 끼워 맞춰야 하는 원리들을 한다발 묶어 놓은 게 아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세계를 이해하고 변혁하는 수단이다. 현실에선 언제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고 새로운 도전들이 나타났다.

연속혁명 이론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바로 이런 일을 겪었다.

레온 트로츠키는 1905년과 1917년 러시아혁명의 경험을 근거로 노동자만이 진정한 유일한 혁명적 계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적 변화를 위해 투쟁을 이끌고 낡은 질서를 일소할 이해와 집단적 능력이 노동계급에게만 있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노동계급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세계의 사회주의화를 향한 ‘연속적인’(장기간 지속되는) 혁명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사뭇 달랐다. 오히려 1940년대부터 언어어 혁명과 민족해방 투쟁들이 일어나 낡은 질서를 무너뜨렸지만 노동자들은 기껏해야 주변적인

구실을 했다.

1949년 마오쩌둥이 중국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을 때 그 바탕에는 농촌의 농민들이 있었다. 마오가 이끄는 세력에 공산당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중국 혁명은 계급과 착취를 폐지한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이끈 쿠바 혁명에서도 노동계급은 대체로 비켜서 있었다.

노동자들이 그 혁명을 지지했을 수는 있으나 그들이 중요한 구실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했다.

오히려 혁명을 이끈 것은 주로 중간계급 출신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계급과 부대였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수십여 년 동안 번번이 민족해방 투쟁을 이끈 것은 지식인·학생·변호사들이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트로츠키의 이론이 틀렸단 말인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을 창립한 토

니 클리프는 트로츠키 이론의 대부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자본가 계급 전체는 분명히 진정한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투쟁을 이끌 수 없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이었다.

그러나 혁명가들의 태도가 변했던 것이라고 토니 클리프는 설명했다.

일탈한 연속혁명

그 지도자들은 스스로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했고 자본가 계급이 하지 못한 방식으로 독립을 위해 싸울 결의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레닌과 트로츠키의 노동자 국제주의를 국민국가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위계적 수단으로 왜곡한 스탈린주의 전통에 의지했다.

토니 클리프는 이 과정을 “일탈한 연속혁명”이라 불렀다.

수십 년이 지나자 스탈린주의의 영향은 줄어들었지만 마르크스와 트로츠키 이론의 핵심 요소들은 여전히 의의를 잃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혁명적 투쟁을 지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치 세력으로 발

전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중요한 까닭은 노동자가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계급 자체를 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계급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변화를 바란다면 집단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만일 농민 집단이 토지의 일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이들은 자기네들 사이에서 토지를 분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노동자 집단은 공장을 차지하게 돼도 공장에서 여전히 함께 일해야만 한다. 기계의 한 조각을 떼어내 혼자서 일할 도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주의의 기초가 되는 노동자들의 힘의 바탕에는 집단적 소유가 있다.

좌파에게 이것의 함의는 명백하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노동자는 변화를 위한 투쟁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선진국뿐 아니라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선두에 서서 소상인, 농민, 피억압자 들의 투쟁을 이끌 수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여러 투쟁에 경제적·정치적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연속혁명’에서 부각되는 한가지 측면이다. 나머지 하나는 국제주의다. 자본주의는 국제적 체제고 일국의 발전이나 투쟁은 세계적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

따라서, 예를 하나 들자면 팔레스타인들의 해방은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투쟁의 향배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혁명이든 살아남으려면 세계로 확산돼 ‘연속적’이 되는 수밖에 없다.

오늘날 세계에는 우리를 공범과 착취로 내모는 체제를 전복하는 것에 이해관계를 가진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체제 전복에 있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저절로 급진적 변화가 가능하다거나 심지어 그런 변화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무엇을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진다. 이것은 결국 정치의 문제이자 설득과 투쟁의 문제이며 동시에 조직의 문제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번역: 천형석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지향하는

계간 **마르크스21**

9호(2011년 봄) 가격 : 16,000원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아랍 혁명 특집호 : 세계를 뒤흔드는 아랍 혁명 — 의미와 전망

아랍 혁명의 귀환 _ 알렉스 캘리니코스

이집트 혁명의 제1막 _ 필립 마플릿

독재 정권의 무덤을 판 사람들 _ 앤 알렉산더

튀니지의 민중 혁명 _ 샴세디네 므나스리

리비아 혁명, 어떻게 볼 것인가? _ 김하영

아랍 민족주의의 부상과 좌절 _ 앤 알렉산더

나세르에서 무바라크까지 _ 에릭 루터

이집트 민주화 운동 _ 라말 엘 마흐디

이슬람주의의 과거와 현재 _ 사에 나키브

21세기 혁명의 현실성을 보여 준 아랍 혁명 _ 김인식

정경:

다시 불거지는 유럽 재정 위기 _ 이정구

마르크스주의 고전 읽기: 〈프랑스 내전〉

파리 코뮌, 최초의 노동자 국가 _ 이현주

정기구독료

1년 64,000원 | 2년 120,000원 | 3년 180,000원 | 5년 300,000원 | 7년 420,000원 | 10년 600,000원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6월 13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인하대학교

8천 명이 모여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다

5월 24일, 인하대 대운동장에서 대동제 폐막식을 겸한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가 열렸다. 1학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도 7~8천여 명이 모였다.

학생들은 지난 겨울 학교 측이 3.9퍼센트 등록금 인상 고지를 했을 때부터 꾸준히 싸워 왔다. 본관 로비 점거, 5천 명이 참가한 3월 30일 학생총회, 본관 2층 전체 점거, 총학생회장 단식, 부총학생회장 삭발 등이 이어졌다.

이날 대회에서 총학생회장은 촛불을 든 수많은 학생들의 응원을 받으며 총장을 면담했다. 두 달 동안 침묵했던 학교 측이 입을 열었다. 특별장학금 형태로 개인당 7만 원씩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투쟁이 요지부동이었었던 학교 측을 한 발 물러서게 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등록금 인상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학생들의 아쉬운 탄성이 터져 나왔다.

중앙운영위원회 성원들은 무대에 올



5월 24일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촛불 수천 개가 인하대 운동장을 가득 메웠다.

라 “끝까지 싸우자”고 말했다. 초대 교수들도 “등록금 문제 꼭 해결되길 바란다”는 응원의 말을 건넸다. 수많은 학생들도 한마음이었다.

총학생회는 “7만 원 특별장학금”이라는 학교 측의 양보안을 받아들일지, 본관 점거를 유지하고 투쟁을 지속할지를 두고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총투

표를 진행한다.

온라인 게시판에선 하루 만에 2백 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릴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가 문제를 이런 식으로 덮으려 하니 답답하다”, “반복돼 온 학교 측의 행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선희 인하대 학생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

타협적 지도부가 물리나며 기대가 커지다

대량 징계 이후 계속돼 온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지회 내부 논란이 결국 강성희 지회장의 사퇴로 일단락됐다.

강 지회장은 5월 2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징계위원회의 재심 결과를 수용하고, 현대차 사측과 이경훈 정규직 집행부 간의 교섭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안을 제출하고 교섭의 전권을 위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웬게도 대의원 압도 다수는 이를 거부했다. 강 지회장은 이런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기는커녕 즉석에서 사퇴를 선언했다.

대의원들만이 아니라, 집행부의 다수도 지회장의 견해에 반대했다. 그래서 대의원대회 직전에 지회 집행부가 낸 공식 소식지에도 “눈앞의 간교한 실리 따위는 던져 버리고 하나 되는 길을 가야 합니다”하

는 글이 실렸다.

조합원들도 분열과 후퇴를 가져올 게 뻔한 이른바 ‘신규인력 부분 채용’과 같은 실리 교섭에 반대했고 울산·전주·야산 등 비정규직 3지회의 단결을 원했다.

이 점에서 강 지회장과 그를 지지하는 일부 집행부가 사퇴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 전원이 사퇴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 때문에 지도력의 공백과 조합원들의 혼란이 불가피하게 커졌다.

하지만 다행히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선 강 지회장의 거듭된 후퇴에 반대해 온 세 명의 부서 대의원대표들이 책임지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비대위 지도부는 당연히 새롭게 단단한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 준비에

힘써야겠지만, 조직 복원의 목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데서도 소홀해선 안 된다.

비대위의 일원인 한 대의원 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했다.

“그동안 잔업·특근을 거부했을 때도 대체인력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의 투지와 조직력이 약해졌다. 징계에 제대로 맞서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좌파 활동가들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투쟁을 전진시키는 것 모두에서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전주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이병무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할 대의원대회 모습

현대차

대기업 이기주의 공세에 투쟁으로 맞서야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임금 15만 6백11원 인상과 상여금 50퍼센트 인상, 정년연장, 퇴직금 누진제 등이다. 완성차 중 퇴직금 누진제가 시행되는 곳은 기아차뿐이어서 의미가 크다. 타임오프제와 주간연속2교대제도 주요 쟁점이다.

사측은 본격적인 임단투 전부터 퇴직금 누진제 요구가 “시대 착오적인 그들만의 리그”라고 비난하고 임금 인상 자체를 강요하는 등 비난하고 있다. 이명박이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귀족 노조’라며 공격하는 것을 보면 올해도 대기업 이기주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는 상황에서도 앓는 소리를 하는 이기적인 사측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부문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줘야 한다.

그런데 주간연속2교대제가 현대차 노조의 단협 요구안에서 빠진 점은 매우 아쉽다. 또 정규직과 같은 임금 인상 적용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요구가 없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도 상징적인 수준에 그쳤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특혜’ 요구안이 그대로 채택된 것도 문제다.

현재 주간연속2교대제 협상은 매우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강도 강화가 기정 사실로 되고 있고 임금도 줄어줄 것 같다.

2공장의 한 조합원은 “협상안을 적용하면 하루 20~30대 차를 더 만들어야 한다. 노동강도 강화를 절대 받아들이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현대차 부회장 윤여철이 주간연속2교대제를 “환영”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저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노동강도와 노동 유연성을 더 높일 속셈이다.

일부 현장조직과 활동가 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듯한데, 나서는 않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반대했을 경우 뒷감당이 부담스러운 것 같다. 그러나 최근 유성기업 투쟁으로 조합원들의 관심도 높다. 사회적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유성기업 노조를 탄압해 현대차에 미칠 파장을 차단하려 했던 사측의 의도가 관찰되지 않도록 3무 원칙(노동강도 강화·임금 삭감·고용 불안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을 바로 세우며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한편, 지난 1차 투쟁으로 정직·해고를 당한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급속노조의 신분보장기금이 지급됐다. 좀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런데 급속노조 신분보장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건은 장기투쟁기금에 해당한다’며 시트부 동성기업 소속 징계자들에게는 신분보장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규약을 앞세워 동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의 의의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김기선

세입자의 무덤, 뉴타운 사업

“파리 목숨을 거부하고 투쟁 깃발을 올렸습니다”

저는 명동성당 맞은편 골목에서 2008년 6월부터 지금까지 티베트 음식과 인도·네팔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저는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과 결혼해 이곳에서 장사해 왔습니다. 개업한 날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날이 단 하루도 없고, 가게 유지가 어려웠던 초창기에는 남편이 다른 사람의 가게에서 먼지 마셔가며 일 도와주고 돈 벌어 오면 그걸 보태서 한 고비 넘기고 두 고비 넘기며 버텨 왔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라 대출도 어려웠고, 대출을 받더라도 금리가 높았으며, 아이가 돌이고, 장애가 있는 엄마를 모셔야 했습니다.

“빚 좋은 개살구.” 장사를 하며 버텨 온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도 수익금의 일부와 작은 후원의 손길을 티베트 난민촌 아이들에게 전해 주며 힘들어도 보람있다고 스스로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탈라를 기억해 주고 다시 찾아 주기도 했습니다.



명동 한쪽에 세워진 강제 철거 규탄 목소리

그런데 지난 4월 26일 등기 한 장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열린 뜯어 봤습니다. 저희의 생존을 위한 노력·꿈·희망을 포크레인으로 부숴 버리고 불도저로 밀어서 27층짜리 금융센

터를 만들 테니 5월 31일까지 나가라는 내용이었습니 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가슴을 쓸내리고 다시 봐도 사실이었습니다. 단 한 마디, 아니 전화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달랑 종이 한 장으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저희는 파리였습니다.

취종만큼의 이주 비용도 아까우니, 보증금 받고 꺼지라는 겁니다. 이 가게를 차리면서 지금까지 한 2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 원입니다. 우리의 전 재산이 쓰레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1989년,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면서 생계 유지를 위해 노점에서 떡볶이를 파셨습니다. 노조 활동으로 회사에서 잘리고 취직도 못하는 마당에, 그 보잘것없는 포장마차는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포장마차를 구청이 와서 때려 부숴했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한 나라에 맞지 않는 노점상이라며... 아버지는 독재정권에 맞서 분신하셨고, 57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인정됐고 저는 그 돈을 들여 이 가게를 차렸는데, 이제 저도 강제 철거를 눈 앞에 두고 있으니 이런 아이러니를 누구에게 말해야 조금이라도 덜 억울

할까요?

저희 가게를 비롯한 열아홉 집이 동시에 통보를 받았습니 다. 용산참사 이후 법이 바뀌어서 사업 인가가 나면 세입자의 이주 비용을 건물주가 주게 됐고, 지금 건물주는 저희 가게 밑에 있는 다른 세입자들을 강제집행했던 시행사입니다. 민간자본을 들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지만 그 사업을 허가하고 계획하는 것은 구청이며 서울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네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집이 모여 대책위를 만들었습니다. 권력과 자본이 한통속이 된 이 사업에서 세입자 열다섯 명이 살아남기 위해, 투쟁의 깃발을 올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강제로 내쫓겨야 하는 삶의 터전밖에 없습니다. 힘을 보태 주십시오. 몇 십년 전에도, 지금도 변함 없는 ‘유전우죄, 무전우죄’ 세상을 바꿀 힘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근혜 티베트 음식점 포탈라 레스토랑 대표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

〈레프트21〉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 www.left21.com
후원하기 계좌번호 (명의: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웹사이트(www.left21.com)를 방문하시면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21

스페인

반란을 일으키고 광장을 점거하다

선 러덕

스페인 곳곳의 도시와 소도시에서 시위대 수만 명이 거리를 휩쓸었다.

이 운동은 세계경제 위기에 맞선 투쟁이 전투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음을 보여 준다. (관련기사 8~9면)
사람들은 진정한 민주주의, 일자리와 빈민을 희생시키고 부자의 배를 불리는 체제 종식을 요구하며 캠프를 형성하고 광장을 점거하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정부의 점거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광장에 머물면서 매일 총회를 열고 운동이 앞으로 나갈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학생인 조엘 산스는 이렇게 말했다.

“갈수록 많은 사람이 이 운동에 참가하고 있고 사람들은 지금의 단결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바르셀로나 캠프는 5월 27일 보건노동자 시위를 지지하기로 했고 6월에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우리는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연대한다는 방침도 통과시켰습니다. 총파업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스, 보건, 통신, 소방소 부문의 독립노조들은 모두 광장까지 이어지는 연대시위를 벌였다.

조엘 산스는 활동가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가 광장에 계속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도심과 주거지로 진출해야 할지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이는 광장의 캠프가



사진 출처: Mario Munera

긴축 정책, 주류 정당에 반대하는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하다

더 큰 운동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거주지별 모임을 열고 이 운동을 자기 지역으로 확산시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반자본주의 구호를 채택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수백 명이 조목조목 자기 의견을 제

기할 기회를 가졌고 결국 반자본주의 구호를 채택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가장 큰 캠프는 수도인 마드리드에 있다. 이곳에서는 3만 명이 광장에 모여 총회를 열고 각종 모임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마드리드의 푸에르타 델 솔 광장을 텐트 도시로 만들었고 이곳의 이름을 ‘대안 광장’으로 바꿨다.

광장의 곳곳에 손수 만든 배너들이 걸

리면서 정치 구호가 성형외과 광고를 뒤덮었다. 이 운동의 핵심 구호는 ‘지금 진정한 민주주의를!’이다.

청년과 실업자가 시위대의 다수다. 스페인 실업자 수는 4백50만 명에 이르며 그중 상당수가 30세 이하다.

이런 심각한 실업 문제, 집권 사회당의 무지막지한 긴축 정책, 노총들의 투쟁 방식 등이 결합돼 사회 기층에서 엄청난 불

만이 쌓여 왔다.

사람들은 광장에서 자신이 바라는 사회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샘 립슨은 마드리드에 사는 교사다. 그는 시위에 참가하고 광장 총회 운영을 돕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계속 다양한 구호를 제안하고 토론에서 논의 중인 것을 일반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호와 함성을 외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제 정치의 올바른 길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과 체제에 반대하는 구호, 혹은 혁명을 요구하는 구호로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변했고 우리 사상 중 어떤 것은 광범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샘 립슨은 이번 투쟁이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 활동에 참가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아무런 정치 경험이 없던 많은 청년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십대와 20대 초반 청년들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다수입니다.”

립슨은 노동자들이 노총에 “심각한 불신”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올 1월 양대 노총은 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정부의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시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밤 제가 일하는 사무실 동료 노동자들도 일이 끝난 후 공장 광장으로 향합니다.

“제 친구는 작은 IT업체에서 일하는데 오늘날 동료 노동자 열 명과 함께 광장을 방문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도 무상교육 티셔츠를 입고 광장을 찾았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5월 21일 광장 캠프를 강제 철거하려다 포기했다. 운동은 여전히 강하다.

이 운동은 스페인 지배자들의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그들의 체제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광장

매일 밤 광장 캠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중 총회가 열린다.

총회는 식량, 보안, 요구 등 여러 정점별 위원회로 다시 나뉜다. 위원회는 다시 소모임으로 나뉜다. 소모임에서 다양한 결정이 내려지며 순번으로 뽑히는 대변인이 결정된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한다.

만약 합의안을 찾지 못하면 대중 투표로 결정을 내린다. 결정된 사항은 대형 확성기를 이용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지된다.

투쟁의 배경

“집도, 일자리도, 연금도, 두려움도 없다”

스페인에서 폭발한 반란의 핵심 축은 스페인 청년들이다.

오늘날 대다수 스페인 청년 노동자들은 계약직이다. 이런 ‘일회용’ 일자리들은 엄청나게 불안정해서 현재 청년의 43퍼센트가 실업자다. 많은 이가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

그들은 또한 높은 월세, 저질의 주거 환경과 교육 개악으로 고통받고 있다.

최근 학생들은 대학을 점거했고 값싼 주택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올 4월에 청년들은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연금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이 운동은 중도좌파 정부에 분노를 표시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스페인 사회당 정부는 공공 지출을 크게 삭감하고 퇴직 연령을 65에서 67세로 상향조정했다. 스페인 사람 76퍼센트가 반대했지만 노총 지도자들은 치욕스럽게도 정부안을 받아들였다.

이런 공격의 결과 5월 22일 치른 지방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덕분에 보수당이 득표 수를 늘리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었다.

사회당은 1백50만 표를 잃고 27퍼센트를 득표하면서 스페인이 민주주의로 이행한 후 최악의 선거 결과를 얻었다.

총리 호세 사파테로는 금융시장 때문에 “손발이 묶였다”고 말하면서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스페인에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가 존재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도시 광장 캠프에 모인 사람들은 대형 모임을 지속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내가 광장에 방문했을 때 1만 명이 모임을 열고 있었다!

2010년 9월 청년과 노동자 들은 총파업에 적극 참가했고 전투적인 대중 파케팅을 벌이면서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나 노총 지도자들이 정부와 타협하고 투쟁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사람들은 실의에 빠졌다.

바로 그때 아랍에서 혁명이 분출했다.

아랍 청년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빈곤에 반대하는 투쟁을 성공적으로 벌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

사회당 정치인과 노총 지도자 들을 향한 분노 때문에 스페인의 반란은 대단히 급진적 양상을 띠게 됐다.

이번 스페인 투쟁은 유럽 투쟁의 전환점이 될수도 있다. 많은 이들이 1968년 투쟁과 비교하고 있다.

새롭게 급진화한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스페인에 국한된 현상은 아닐 것이다.

같은 세대가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고 영국에서도 학생 투쟁이 있었다. 이런 움직임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루크 스토바트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용욱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여러분의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지난 2년 동안 기업 광고 전혀 없이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 2년 (52개 호) 10만 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신청 : 02-777-2792 /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독 기간 중에 구독료나 우편료가 올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레프트21에서 만난 진실을 널리 전하고 싶다면, 한 부를 더 구입해 주위에 소개해 주세요. 자본과 권력에 맞선 저항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길입니다.

